

第243回国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1 號

國會事務處

2003年10月20日(月) 午前10時

議事日程(第11次本會議)

- 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질문

附議된案件

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질문 .....	1
o 의원신상발언 .....	65
o 5분자유발언 .....	66

(10시11분 개의)

○議長 朴寬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질문

(10시12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오전에 12시까지 질문을 실시한 후에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열두 분이므로 오후 6시경이면 회의가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의 APEC 정상회담을 수행 중이므로 차관이 대리 출석하도록 의장이 승인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金景梓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景梓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전남 순천 출신 金景梓 의원입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사이 남북한에 관한 문제가 우리의 국내 문제와 마찬가지로 또 국민투표의 문제도 외교·국방과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우선 국민투표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盧武鉉 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이유로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법학자들 사이에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학자는 “국가안위가 걸린 상황이 아닌데 국민투표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따라서 초헌법적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법리상의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를 이룬다고 하면 현행법으로도 측근 비리를 계기로 하는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金景梓 議員** 본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라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國務總理 高建**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金景梓 議員** 총리께서도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

○**國務總理 高建** 측근 비리 자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측근 비리를 계기로 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신임 투표 여부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景梓 議員** 그러면 이 최도술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도술을 부렸군요.

대통령의 국민투표 요구와 관련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고 국민투표 요구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투표 결과는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국 혼란이나 국정 차질을 걱정하면서 대통령의 새 정부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신임투표를 통해서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결단을 이해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景梓 議員**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특별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재신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國務總理 高建** 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景梓 議員** ‘신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믿고 일을 맡김’이라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현재까지는 재신임 쪽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국민들이 盧武鉉 대통령을 믿고 일을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겸허히 인식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민투표와 같은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저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돌렸던 ‘에스’가 순식간에 분노의 ‘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투표에서 盧武鉉 대통령이 재신임에 성공하게 되면 정치·경제적 상황이 달라

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는 재신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정쇄신책을 마련해서 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정 운영을 해 나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金景梓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盧武鉉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게 되어도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대통령 측근의 비리나 국정 혼란과 무능력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사면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이 나라 국정의 대부분이 盧武鉉 대통령의 화법과 어법과 행동양식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재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盧武鉉 대통령의 처세술과 화법과 어법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획기적인 국정 운영 쇄신책을 새로이 추진하는 가운데에는 인적 쇄신도 필요하지만 좀더 새로운 국정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景梓 議員** 그렇다면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얻기 전에도 국정쇄신을 위해서 내각 개편이나 청와대 개편의 필요성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지금 하지 않고 국민투표 이후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 현시점에서 내각의 개편은 국정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제의한 현시점에서 더욱이 국회 예산심의나 개혁입법이나 민생 안정 등 산적인 국정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신임을 받은 그 시점에 가서 국정 운영 쇄신책을 마련하실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치권에서 재신임 절차의 정치적 합의와 초당적인 국정 협조를 담보하면서 내각의 조기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총리로서는 새로운 국정 운영 시스템의 출발을 위해서 내각 개편도 신중히 검토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金景梓 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걸핏하면 정치적 위기를 내세워 가지고 이런 것을 국민투표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국민투표 하자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盧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요구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또 국민투표 해야 합니까?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國務總理 高建 이번 상황은 아주 특수한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복되어서도 안 되고 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景梓 議員 좋습니다. 그 답변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투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신임투표를 가지고 아직 국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재신임투표가 시행되어서 대통령이 불신임을 받게 된다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될 전망이 생깁니다. 그때 내각을 확실히 장악하여 국정 공백을 막을 마음의 준비를 총리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盧武鉉 대통령이 불신임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金景梓 議員 그 말씀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발언은 될지언정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경우도 총리는 예비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대통령은 무조건 불신임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발언은 대통령에게 충성은 될지언정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어떻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金景梓 議員 이 발언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 취소하세요.

○國務總理 高建 저는 불신임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저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景梓 議員 여론조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가지고 매번 국정을 따진다면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여론조사 잘해서 께럽 회장·사장,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왜 필요합니까? 여론조사는 바뀌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방금 총리의 그 말씀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잘못된 것입니다.

○國務總理 高建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합니다.

金景梓 의원이 주장하시는 대로 만약 만에 하나라도 불신임이 된다고 하면 총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 국정을 장악해서……

○金景梓 議員 총리는 국정 공백을 막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국정 공백을 막을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만일 불신임이 된다면 총리도 함께 사퇴해야 할지 후속 절차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을 장악해서 관리해야 할지 하는 것은 저는 고민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金景梓 議員 이것은 완전히 안 되면 ‘배 짜라’ 식입니다. ‘대통령이 불신임되면 나도 사퇴할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오’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지금 사퇴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金景梓 議員 시간이 바쁘니까 이것은 이만큼 해 두고요.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 영향을 끼쳐왔고, 현재는 경제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인 우주선의 발사를 성공시키고 양리웨이라는 우주인을 ‘태공인(太空人)’이라는 신조어로 명칭해서 국내적으로는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기고 실용적으로 국민을 단결시키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과학기술과 중국인의 도전정신을 압축적으로 선전해서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직 뚜렷한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정부 홍보부처에서는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景梓 議員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준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단어는 2개 다 영어입니다. ‘역동적인 한국’이라는 말 가지고 21세기 한국을 대표한다는 것이 어쩐지 어색하군요. 다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송두율 교수가 차용한 어중간한 개념인 ‘경계인’이라는 갈등과 고뇌의 단어를 가지고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해묵은 이념 논쟁으로 사회가 들끓고 있고, 급기야는 盧 대통령까지도 스스로를 ‘정치적 경계인’이라고 규정해서 또 다른 사회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독일과 프랑스의 분쟁지역이던 알자스로렌 출신으로 진정한 의미의 경계인이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 경계의 한계를 벗어나서 불모의 아프리카에서 의술을 통한 인류에 대한 봉사로 세계인으로 거듭 태어났으며 성인으로서까지 불릴 만큼 위대한 생을 마쳤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알자스로렌 지방의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과연 성공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실패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같이 그 경계에 속한 사람이 그 경계의 원인을 해결하겠다고 노력하면 할수록 갈등의 폭만 커지게 만듭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스스로 규정한 대로 태생적 한계인 지역정서의 당사자로서 또한 전모가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드러나겠지만, 부패 고리의 당사자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오히려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역사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현실의 진행 속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여 盧武鉉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고 세계로 향한 국가 전략 목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라고 하는 것은 현정 운영 방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실시하려면 먼저 정치권에서 합의되어야 하고 또 정치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가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전제가 가능하다면 저는 지금 지적해 주

신 새로운 국정 운영 시스템을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金景梓 議員 좋습니다.

다음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라크전쟁은 명분이 없는 미국의 침략 전쟁입니다. 11세기 말엽인 1095년부터 1270년까지 전개된 이슬람 지역에 대한 십자군전쟁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이번 이라크전쟁은 조시 부시가 벌인 21세기판 십자군전쟁입니다. 이 십자군전쟁에 우리는 4년 동안 2억 5000만 달러만 지원하면 충분할 텐데, 전쟁이 다 끝난 상태에서 모슬 지역이라는 대단히 위험한 지역에 왜 우리의 지상군을 보내겠다고 하십니까? 이 정부가 왜 이렇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전투병이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현재로서는 파병 부대의 성격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론수렴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국익, 한미 관계,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고려해서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평화·재건 지원 부대를 추가 파병하기로 일단 원칙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대의 성격과 규모와 시기는 또 지역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景梓 議員 좋습니다.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다, 그러면 옛날 朴正熙 대통령이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를 애용하신 적이 있는데 전투병을 보내서 싸우면서 이라크를 재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國務總理 高建 결국은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 이라크 국민을 위해서 파견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金景梓 議員 좋아요.

이라크에 국군 전투병이 파견되어서 미국의 침략 전쟁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느냐? 우리 정부 스스로가 북핵문제도 무력으로 해결해도 좋다는 명분을 미국에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金景梓 議員 그 논리까지는 가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金景梓 議員 좋습니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18일 추가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6일 전인 12일 이미 나종일 보좌관이 盧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우리 파견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제가 이 점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盧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파병을 하겠다, 아니면 파병을 하지 않겠다, 딱 마음을 정하고 나는 파병하겠다고 결정했으면 내가 왜 파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시켜야 하고, 파병을 반대하면 나는 왜 반대하느냐 해서 파병하고자 하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싹 없어지고 국민여론만 보고 앉아 있다…… 국민여론을 본 것이 아니에요. 유엔 안보리 결의만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소신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일국의 지도자라고 봅니까? 왜 이렇게 미국의 눈치를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고려 요소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기다려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景梓 議員 좋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술이라는 지역은 총리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영토의 절반에 해당될 만큼 광활한 지역이며 지금도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데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지난 18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미군은 물론 미군 지원을 위해서 파병되는 다국적군에 대한 공격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라크 저항세력들도 전열을 가다듬고 총공세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700만 국민이 14억 이슬람권 인종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더욱이 테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희생된다거나 나아가서 현지 주둔군이 빈 라덴 등 이슬람 자살특공대에 의해 사상자 수가 격증한다면 이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가 져야 합니까? 총리가 지는 겁니까, 대통령이 지는 겁니까?

○國務總理 高建 물론 대통령과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안전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景梓 議員 안전대책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50명, 100명…… 지금도 미국은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혀 명분 없는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잃게 되면 국가 이익이고 뭐고 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된다면 단 한 사람이 희생된다 하더라도 총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가지고 있습니다.

○金景梓 議員 6자회담에 대해서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겠습니다.

북한은 10월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일본이 핵문제와 관련이 없는 납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기적 목적에서 핵 협상을 이용하고 있다” 하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북한의 담화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의 당국자들은 일본이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북한의 핵 협상에서 일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일축했고, 일본 고이즈미 총리마저도 “북핵문제는 일본의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데 제가 놀랄 만한 것은 우리 대통령도 일본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북한과 솔직히 말해서 전후 배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국교도 열지 않고 있는 나라인데 갑자기 6자회담에 끼어들어서 자기 이익이나 보려고 납치자 문제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북한이 1차 6자회담에서 제시한 4단계 해결방안에 일·북 간 국교 정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6자회담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납치 문제와 6자회담을 연계시키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일 간에, 한중일 간에 양해되고 있는 선은 납치 문제를 6자회담에서 제기는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대화는 일·북 간 쌍방대화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양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景梓 議員 좋습니다.

저는 6자회담은 일본과 러시아가 빠진 4자회담

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먼저 묻는데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金景梓 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채널이 완전히 끊겼고, 이로 인해서 대북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인해서 林東源 등 몇 사람의 정치권 대북 채널이 없어졌고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의 죽음으로 그나마 이어졌던 민간채널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대북 채널 중단은 남한의 정치권에서 북한의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어졌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관계가 결그러워진 참여정부와 북한이 국민의 정부와 같은 의사소통 라인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관론도 있습니다.

난마처럼 얽힌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金大中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북핵문제와 같은 중대사안은 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의 담판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고 현재 시점에서 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담판을 벌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金大中 전 대통령입니다.

참여정부가 金大中 전 대통령에게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金大中 전 대통령이 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의 담판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도록 하고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성사시켜서 한 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국론을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적극 주선하기 위해서 이런 견해를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6자회담의 진전 상황,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 또 북한의 입장, 이러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金景梓 議員 고맙습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柳興洙 의원 나오셔서 질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興洙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수영 출신의 한나라당 柳興洙 의원입니다.

盧武鉉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국정 행태를 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잘 되어 갈 것인지 정말 불안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땀으로 이루어 놓았던 경제적 성과와 민주화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며칠 전 남북장관급회담에 다녀오신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지난주에 평양 남북장관급회담에 다녀오셨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예, 14일부터 17일까지 다녀왔습니다.

○柳興洙 議員 거기에서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북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우선 제2차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관련국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하고 특히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柳興洙 議員 그런데 그 성과가 있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을 했잖아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16일 밤에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柳興洙 議員 결국은 여태까지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남북장관급회담을 다섯 차례 했는데 북한 핵문제가 공동합의문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핵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柳興洙 議員 그리고 북한은 그 회담 도중에 때가 되면 핵 억제력을 공개할 것이다 하는 협박 공갈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혹 때려 갔다가 혹 붙이고 온 것 아닙니까? 장관, 이 회담을 위해서 장관이 평양에 가기 전인, 14일부터 회의가 있었는데, 13일에 북한에 비료 10만t을 주기 위한 것을 의결했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예.

○柳興洙 議員 10만t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306억 원입니다.

○柳興洙 議員 306억이라는 돈, 10만t을 왜 갑자기 회담하기 전날인 13일에 의결했어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물론 내부적으로 그것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아야 된다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사실 비료는 적십자 차원에서 무상으로 북쪽에 보내는 것입니다, 쌀은 정부 대 정부 차관 형식으로 보내지만, 이른바 적십자 라인으로 해서 인도적 차원으로 가는 것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하는 경우에 그것이 조금은 우리 입장을 오히려 떳떳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柳興洙 議員 결국 10만t을 그 전날 보냈다는 얘기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좀 잘 봐 달라. 좀 성과를 얻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얻어진 성과는 종전보다 더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10만t, 306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러한 혈세를 이런 회담에 이렇게 낭비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까지 본다면 장관급 회담만이 아니고 남북관계 회담이 이 盧武鉉 정권이 들어서서 YS정부 때나 DJ정부 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담을 할 때마다 각종 지원을 약속한다든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는 남북관계 회담도 뭘 쥐야만 된다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 건전한 남북관계로 발전하려면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저는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핵 관련해서는 16일 밤에 외교부 대변인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제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서 80분에 걸쳐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또 종결회의에서 또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북측이 문서로 적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6자회담 이후에 미·북 간에 뉴욕 접촉마저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우리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화를 하기 위한 우리의 방식이다.”

○柳興洙 議員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공갈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공동합의문에 여태까지 들어갔던 것이 들어가지 못했어.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달러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DJ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여태까지 달러로 지원한 액수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얼마나 됩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정부 차원에서 달러 준 것은 없습니다.

○柳興洙 議員 민간 기업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에 간 달러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금강산관광 경비로 들어간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한 달에 3000명 정도 해서 두당 육로관광 50불……

○柳興洙 議員 그것 말고 통틀어서 더 깔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것 말고 없습니다.

○柳興洙 議員 그것 말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9억 3600만 불을 주기로 했던 것 중에 4~5억 불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과 그 이외 각종……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것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柳興洙 議員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말이에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것은 4억 불 넘어가 있습니다.

○柳興洙 議員 4억 불이 말도 안 되지요. 북한 비밀송금까지는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인데 본 의

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비공식·공식을 다 합해서 본다면 15억 불 내지 20억 불,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기관도 20억 불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돈이 북한의 무기증강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일이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현금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든 기업이든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지금 송금 특검이 있는 이후에 현금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柳興洙 議員** 다른 기업에서는 가고 있잖아요. 금강산 관광의 대가 지불하는 방식도 두당 100불이다, 50불이다 하는 방식도 북한이 필요한 생필품으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한다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統一部長官 丁世鉉** 지금 현물 비중을 차츰차츰 높여 나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거기 가서 호텔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쌀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柳興洙 議員** 그러니까 현금 지원을 앞으로 계속 중단해 주기를 바라고……

○**統一部長官 丁世鉉**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柳興洙 議員** 여러 가지 경제협력에서도 수익성 원칙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통일부장관은 그만하고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 이라크 파병은 이제 결정된 것이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柳興洙 議員** 일본은 파병 문제가 언제쯤 결정되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柳興洙 議員**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3월에 주일 베이커 대사가 정식으로 요청하고 5월에 고이즈미 수상이 미국에 가서 크로퍼드 농장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체적인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근거가 되는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어요. 말하자면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 바로 결정하고 다만 시기 규모 등은 여러 가지 현지조사, 총선이다 하고 미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유엔 결의를 빙자해 유엔 결의가 있자 서둘러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럽즈펠드의 방한이 연기되고 부시가 일본을 들르면서 한국도 건너뛰어 가고 또 여러 가지 냉랭한 한미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韓昇洲 주미대사가 급거 귀국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인해서 급하게 유엔 결의가 되자마자 그것을 빙자해서 이것을 결정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이미 1차 파병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 파병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원칙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柳興洙 議員** 북한의 핵문제와 연계해서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나 이러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파병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가 공고하게 되면 그 공고화된 한미 관계 위에서 북한 핵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柳興洙 議員** 이것은 북한 핵문제와 연계했던 징후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尹 외무부장관이 미국에 가서 발언한 내용이라든가 또 뉴욕 타임스에 보도가 되어서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설하는 외무부의 북미국장의 해명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은 결국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파병을 결정할 수 있다 하는 등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미국이 이에 대해서 분개해서, 아까 존경하는 金景梓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파병을 안 해도 좋다, 그러면 동맹국 사이에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반응이 나오자 서둘러 이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나종일 보좌관이 미국에 가고, 유엔 결의가 있자 이것을 빙자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결정하고 만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파병을 하면서 국론은 국론대로 분열시켜 놓고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생색도 내지 않고 이러한 무능한 외교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國務總理 高建**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추가 파병문제를 다루는 안보 관계장관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것이 네 차례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부터 추가파병이 결정될 때까지 네 차례의 맥을 보면 그런 일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柳興洙 議員 그런 일은 사실과 다르다는 총리의 그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발표한 문항 제2항에 보면 “파병부대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柳興洙 議員 그런데 우리 국민은 지금 미국이 요청한 파병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디다마는, 그것은 정부의 공식발표도 아니고, 미국이 요청한 파병 내용이 무엇인지 규모와 시기와 조건과 주둔지역이며 주둔비용 등은 어떠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총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미 측의 파병 요청 때에는 ‘전투병’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라크 전후 재건 과정에서 치안유지를 담당할 ‘안정화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부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규모로서 참고로 폴란드형 사단의 예시를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론에 몇 명, 몇 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체 숫자적인 요청은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미 측과 협의를 하고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興洙 議員 주둔 지역이나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지역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柳興洙 議員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발표가 되어야만 올바른 여론이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결국 국익의 문제인데, 총리께서나 대통령께서도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파병을 결정했다 또는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파병에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제일 큰 것은 파병을 통한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의 유지·발전에 우리 한국의

경제·안보 환경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가 공고화되면 우리 한반도의 경제·안보 환경에 대한 해외 신인도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많이 제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의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도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파병은 중국적으로는 이라크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전후 복구에 대민 지원 사업, 재건 지원과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국가위상의 제고라고 하는 국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柳興洙 議員 이 중에서도 경제적 국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1000억 불 가까이 될 이라크 재건 복구 시장에 우리 기업이 폭넓게 참여하는 문제라든가 석유개발권, 우리가 이라크에 가지고 있는 채권, 약 17억 불 정도가 되지요?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문제라든가 등등 국민들은 과거의 월남특수 정도는 못 간다 하더라도 중동특수 정도는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려운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공통적인 국익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이 국익을 어떻게 반영해 나가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이 파병으로 인해서 아랍권 주변국가에 대한 정서도 고려해서 사전에 선무 외교활동도 필요합니다. 또 점령군의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과 이 모든 것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종합적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태스크포스팀 같은 것을 만들어 가겠지요?

○國務總理 高建 관계 부처 간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세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柳興洙 議員 단단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기회에 정치권에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각 당도, 오늘 우리 통합신당 여러분들 많이 안 나오셨습니까마는, 국론 분열을 조장해 나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파병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당론을 모아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파병 안 하는 것보다는 파병을 하는 것이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비록 시민단체의 낙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파병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 차원의 현지조사단도 파견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재신임 정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신임 정국에 대한 진단이나 답변은 조금 전에도 총리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국이 재신임 국민투표가 우리의 난국을 푸는 해법으로서 좋다고 인식하는 총리의 정국 인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어떤 여론 전문가는 진단하기를 이것은 정권 말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8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정권 말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투표로 풀 상황이 아니라 아마도 이 상태가 그냥 지속이 된다면 4년을, 국정 수행을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신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정 혼란을 지속시키지 말고 이 기회에 차라리 깨끗하게 대통령이 해야 해 버리는 것이 盧武鉉 대통령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통령에게 충언을 드리는 것이 또 총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신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짓는 것이 나라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柳興洙 議員 하야를 권고하십시오. 그것이 高建 총리를 역사에 기억케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총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하야권고결의안…… 하야권고결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총리, 오늘 이렇게 민의의 전당에 마주 서 보니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로 출발해서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총리의 승승장

구를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늘 박수를 보내고 축하를 하고 격려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다같이 60대 후반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직의 마무리를 명예롭게 깨끗하게 해야 할 시점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高建 총리를 출세의 달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실과 청렴의, 행정의 달인으로 늘 존경해 왔듯이 지금도 이 국가적 위기에 처해서 대통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총리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나라의 중심을 잡고 또 대통령에게 이 난국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를 드려서 하야를 권고하는 직언을 통해서 역사의 물결을 바꾼 용기 있는 재상으로 남게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벼슬은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 순간에 역사에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일 총리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유재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건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국정에 수고하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유재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 盧武鉉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의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 중 어느 한 사람도 경악을 금치 못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의 재신임 결정은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자기반성이자 한국 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 정책 혼선을 바로잡고 진정한 참여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부끄럽지만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충심을 전달하고 싶은 충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5일 재신임 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여야가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한 본 의원이 섬기고 있는 서울의 성북구 어느 시장의 상인들이 “대통령이 저렇게 자기 허

물을 폭로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이 국민들에게 호소하는데 여야 정치인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앞으로 국정을 잘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힘을 모아야 될 때라는 생각을 본인은 해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盧 대통령의 재신임 결단으로 심각한 국정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라든가 6자회담, 통상문제, 노사갈등, 경기부양 등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기강의 확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총리께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민생안정을 비롯한 국정 수행에 추호의 흐트러짐이나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는 자세로 내각을 추스르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가지고 각 부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잠깐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를 특별 점검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 이미 설치·운영 중에 있던 정부합동점검반에다 관련 사정기관의 전문 감찰인력을 충원하고, 또 제가 직접 감사원장직무대행께 전화를 드려서 감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100명 규모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무사안일, 복지부동, 고질적인 부조리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공직기강 관계 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든지 또 검찰, 경찰 등 소관분야별로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특단의 공직기강 대책을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재건 의원 좋습니다.

한미관계와 외교원칙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강력하게 결속된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안정적인 외교정책을 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북한의 핵문제 또 한미동맹에 대한 자성을 거치면서 한미관계의 변화는 물론 새로운 외교 전략과 원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외교정책은 한미관계의 과거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현재와 미래의 발전적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전략과 원칙의 부재 때문에 각각의 현안마다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한미관계의 중장기적 목표와 외교원칙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저는 한미관계를 군사관계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격상시켜 나가면서 동반자로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한미관계의 중장기적인 외교전략을 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건 의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외교 현안을 보면 대부분이 대국민 설득 논리의 부족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든가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의 초기부터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국익의 차원에서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국민들을 맞춰 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의 역행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외교현안을 다룰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외교부와 통일부를 포함한 주무부처 및 각 정당이 골고루 참여하는, 명칭은 나중에 바뀌어도 되겠습니다만 가칭 ‘국회외교정책협의체’ 구상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의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와 국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결정한 일도 그 과정에 국

력의 소모가 너무 많았던 것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주요한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국회와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협의체 구성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건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외교부장관을 대신해서 金 차관께서 나오셨지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오시는데 질의를 시작합니다.

6자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주역으로 참여한 첫 회의입니다. 1994년의 수모를 우리 국민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막중해졌습니다. 우리는 6자회담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외교부에서도 방침을 만들었고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의 이해보다는 한반도의 평화 구현을, 또 그것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우리 정부가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더 증대시키고 북한 및 주변 4대 강국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고 믿는데, 우리 외교부장관의 대답을 들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자회담, 그 이전에 3자회담이 개최되기 전뿐만 아니라 그 개최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해결방안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과도 협의해 왔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유재건 의원** 6자회담의 우리의 방안으로 우크라이나 모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하고 저희들하고는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식의 안보 보장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

제입니다.

○**유재건 의원**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다자간 합의각서를 통해서-미국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집단안전보장을 지켜 주면서 북한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상당히 연구해 볼, 그리고 활용해 볼 만한 모델인데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예, 알겠습니다.

○**유재건 의원** 잡 포스팅(Job Posting) 제도 및 등급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외교부 내를 새롭게 좀 개혁해 보려는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외교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문성 있는 외교 전문가의 훈련과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외교부가 야심차게 잡 포스팅 제도와 등급제를 추진해 왔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면이 여기저기에서 부각되고 있어서 갈등은 물론이요 외교정책의 혼선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시행상에 일부 문제점이 노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부처에서 그동안 아주 깊이 1년 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보완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건 의원** 이라크 파병 문제입니다.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이라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마침내 이라크 문제는 평화 정착과 경제 재건을 위한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계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라크 파병 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난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에서도 드러난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결의안 통과 직후 파병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미 이라크 문제가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몇몇 의원들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초기부터 “결정이 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작은 실수라든가 또 발표의 미숙 같은 것 때문에

여론을 오히려 들끓게 만들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추가 파병을 한다면 파병부대의 성격과 형태 규모 시기 등을 결정해야 된다고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원내 대표연설에서 우리 당 대표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초당적 국회 조사단 파견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립적인 국회 조사단의 현지 조사를 토대로 해서 최대한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후 재건사업은 귀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14살 때 6·25사변의 피해자입니다.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집은 불탔습니다. 저는 전후회복을 위해서 한국에 주둔한 유엔군과 미군의 밀가루 그리고 우윳가루를 먹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과서도 유네스코를 통해서 증정받고 전달되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라크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라크 주민들이 우리를 환영할 대목은 어떤 것들인지 심각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이 문제가 국론 통일하에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향후 이라크 문제 처리 과정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국회 조사단을 파견해야 된다는 존경하는 柳興洙 의원의 권고도 있었습니다만 동의합니다. 속히 국회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하고 또 미국과 같이 의논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요청하면서 전투병(combat force)이라는 얘기는 쓰지 않고 치안유지를 안정화군(stabilizing force)이라는 얘기를 썼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사실입니다.

○**유재건 의원** 평화안정군은 아주 훌륭한 착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세계평화에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아주 호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저희 외교부가 관계부처와 협조해 가면서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했을

때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도록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유재건 의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외부의 압력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무역에 의존해 가지고 살림을 꾸려오던 우리나라가 지금 한·칠레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특별법의 지원 내용을 현실화해서 피해농민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국회도 대승적 차원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통상전략의 다변화와 경제적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고 여기에 따른 국익이 엄청납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동차 수출 문제라든가, 휴대전화, TV, VCR 등의 매상이 훨씬 떨어져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농민들을 설득하고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내세워서 이 문제를 추진하시기를 바라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저희 부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 전체 차원에서 관계되는 지원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건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몇 가지 질의합니다.

12차 장관급회담을 마치고 상당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셨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유재건 의원** 북측이 여러 가지 자기들 외교관계나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마지못해서 12차 회담에 응했지 진정으로 의논할 생각이 없었다고 느꼈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북측도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 놓고 있으나 이번에 와서 6자회담과 관련된, 핵문제와 관련된 압박이 있으리라는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핵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난데없는 소위 강탈적 요구를 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재건 의원** 이번 회의의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고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6자회담과 관련해서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의사 전달을 했고, 특히 10월 16일 밤에 나온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세 번에 걸친 강력한 추궁 끝에 미국이 6자회담 등등 여러 가지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뉴욕에 접촉마저 끊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식으로 대화 의지의 표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해명을 받아 냈습니다. 그것은 미국 측에도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유재건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정책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 대북 정책에 있어 실리 추구는 물론 향후 추진 일정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서 그동안 실리보다는 명분 위주로 나갔던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 남남갈등의 해소는 대북 지원에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 탈북자가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이질감 해소가 중요하다는 내용, 탈북 초·중·고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탈북자 범죄 예방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경수로사업 중단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새로운 대북 제안은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 등의 질문이 있으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질문서와 제가 준비한 원고를 속기록에 수록해 주시기를 양청드리면서, 국방부장관 잠깐 나오시지요.

지금 온 국민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미 2사단 후방 재배치 문제를 한미동맹 협상의 아젠다로 수용한 것은 국방부의 실수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미군의 한국에서의 부대 배치 조정은 전 세계적인 해외 주둔군 조정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고, 또 한미동맹 그 자체가 하나의 쌍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미 측에서 협의를 요구하는데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재건 의원** 향후 미국과 중국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를 고려할 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 의

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큰일나겠다고 하는 선입관 같은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부더라도 국방부는 주한미군 후방 재배치의 전략적, 전술적 효과를 냉정히 분석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잘 알겠습니다.

○**유재건 의원** 다음 질문은 우리의 구명 뚝린 영공—우리 군의 현재입니다. 본 의원이 공군 출신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공전력 중 고고도 항공기 대응 무기체계인 나이키미사일은 아시다시피 수십 년 전에 단종된 기종으로 현재는 수리부품마저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995년에 도태 예정이었던 나이키미사일은 실제 96년, 98년, 99년 세 차례에 걸쳐 우리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2000년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사격훈련까지 중지하였지만 대체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훈련조차 할 수 없는 고물 미사일로 우리 군이 수행할 수 있는 방공임무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현재 고고도 방공체계인 나이키미사일이 이미 운용 수명을 초과해 가지고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작년, 제작년 두 해 동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했는데 가격 협상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재건 의원** 예산과 가격 문제군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그렇습니다.

○**유재건 의원** 차세대유도무기(SAM-X)사업은 지난 85년 소요 제기된 이래 계속 순연되다가 2001년 미국 패트리엇미사일을 대상으로 가격협상에 들어갔으나 실패했습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그렇습니다.

○**유재건 의원** 얼마 전 발표된 2004년부터 2008년 국방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원래 2004년부터 추진될 예정이었던 차세대유도무기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2005년으로 또다시 연기된 것이 사실입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습니다.

**○유재건 의원** 2005년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고 한다면 방공전력에 문제가 심각한데 국방부가 군 전력을 정확히 분석해서 적절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지 구멍 뚫린 하늘을 가지고 근대전을 치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2005년도에는 반드시 추진하도록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건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요구하신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국회의 독자적인 조사단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장으로서의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이미 결심을 했고 오늘 내로 각당 대표들과 모여서 파견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鄭亨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亨根 議員** 저는 부산 북·강서갑 지역구를 가진 鄭亨根 의원입니다.

총리께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盧武鉉 대통령은 파병을 북한 핵과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등 차분하게 대처하지 않고 너무 말이 많았고 따라서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 조기 파병론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 미국의 이라크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하루 만에 NSC를 열어서 바로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우선 미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어떤 부대 ‘공병, 전투병’ 규모는 어떻게, 주둔지는 어떻게, 이런 모든 데 대한 파병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았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문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 협조 요청을 구두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亨根 議員** 구두로 어떻게 받았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라크 전후 재건 과정에 치안유지를 담당할 안정화군을 파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과 그 규모는 독자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 규모의 요청을 받았습니. 그 외에 구체적인 지역, 또는 병력의

인원수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鄭亨根 議員**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써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의 구체적인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여야 정치권과 협의, 사전조율도 하지 않았고, 盧 대통령이 지지하는 통합신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고, 또 국민에게 설득하거나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도 없이 졸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돌면서 한국만 뺐습니다. 그리고 급거 韓昇洲 주미대사가 와서 미국의 냉랭한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군의 3분의 1(1만 20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때는 盧 대통령이 “미국에 사진 찍으러 뭐 하러 가느냐? 주한 미군 없으면 어쩌냐?” 이런 발언을 하다가 지금은 급기야 선회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챙겨야 할 실리와 명분을 하나도 못 얻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선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하기까지는 그동안 신중한 검토를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 검토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여한 장관급 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만 해도 네 차례가 됩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기 전에 NSC 상임위원회는 5~6회 연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 내에서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韓昇洲 대사가 귀국한 것은 APEC 회담에 한미정상회담 주재국 대사로서 참석하기 위해서 일시 귀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亨根 議員** 뉴욕타임스 18일자 보도인 주한 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런 사실을 언제 알았고 미국 정부 당국과 그동안 협의를 했는지, 또 왜 그동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부인했는지, 언론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개 미국 정부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뉴욕타임스에 흘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시점에서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전혀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鄭亨根 議員**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물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무기체계가 발전됨에 따라 여러 가지 전략개념이 전환되고 있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반도 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미동맹조정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과 재배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로부터 감축 협상 제의를 받았든지 하는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鄭亨根 議員** 총리께서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 차원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무기체계 발전에 따른 전략개념의 전환, 개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흐름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鄭亨根 議員** 이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를 불신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그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라고 봐도 됩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鄭亨根 議員** 저는 이왕 파병을 결정했으면 이 파병이 성공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파병을 하더라도 규모는 독자적 전투가 가능한 사단병력 정도를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랍권을, 이라크를 우리가 이해하고 헌신하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랍권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체에 문화적 접근, 의료, 기술, 복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부가 대단히 유념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라크 정부의 정치권에 간섭하거나 국내 문제에 우리가 관여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소위 요새 말하는 386 출신 국회의원이나 이상한 NGO들이 가서 휘젓고 다니면서 내정간섭을 하

거나 자칫하면 테러분자들에게 역이용당하거나 손을 잡거나 이러한 것은 절대 정부 차원에서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러한 지원이 성공하기 위해서 각 부처와의 협조하에 총리 산하에 이라크파병지원본부단을 만들어서 면밀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선 첫째, 이라크 추가 파병은 중국적으로는 이라크 국민을 위해서 파병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에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지금 예시해 주신 총리실에 지원본부단을 설치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鄭亨根 議員** 제가 386 출신의 일부 튀는 국회의원들과 NGO에 대해 질문했는데 답변은 어떻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제가 질문을 잠시 놓친 것 같습니다.

○**鄭亨根 議員**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저번에, 우리가 이라크에 공병단을 파병할 때에도 이라크의 무너진 전 정부의 국회의장을 초청해서 이라크 바그다드를 휘젓고 다녔는데 또다시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내정 관여나 자칫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당이라든지 테러단체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유의하겠습니다.

○**鄭亨根 議員** 저는 송두울 씨는 바로 간첩이고, 간첩의 차원을 떠나서 북한 지도원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3월에도 북한에 갔었고 금년 9월 9일에도 金正日에게 충성맹세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金正日 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인민을 위한 발언을 하거나 또는 金正日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하는 발언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드러나고 양파같이 껍질이 벗겨지면 한마디 한마디 대응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아주 전형적인 고위급 북한 간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원고도 없이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규제하는 법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도 그 연설을 이 자리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뜻은, 첫째는 송두울 씨 사건은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너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점에서는 좀더 성숙한 사회로 가야겠다고 하는 뜻, 두 가지 메시지를 저는 받았습시다.

○鄭亨根 議員 세계 첩보사상 간첩이 기자회견을 하고 매일 언론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심지어 YTN은 기자회견 생중계를 하는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어느 외국인이 한국은 참 희한한 나라라고 합디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개방된 사회이기는 합디다만 그러나 검찰이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鄭亨根 議員 지금도 송두울 씨는—송두울 교수가 아닙니다. 국정원의 수사 결과 보고에 보면 ‘송두울 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송두울 교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지금도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고 자기는 간첩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득이 주독일 북한 이익대표부—우리 같으면 대사관입니다—의 공작 총책임자 김경필의 대북 보고문을 여기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에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그 보고문과 관련된 상세한 디스켓입니다. 이것을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 2월 22일 송두울씨가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장엽이가 내가 우리 당의 지도기관 성원임을 알고 있는가라고 문의해 왔으니 지침하달 바랍니다”라고 평양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 3월 12일 송두울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국에서는(북한에서는), 황가가(황장엽이), 선생이 당중앙회 지도기관 성원이라는 사실을 모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모략선전으로 강하게 반박하라고 지도했음” 대북 보고를 했어요.

세 번째, 97년 4월 3일 송두울에게 “통일토론회,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문제는 지금 남

조선 괴뢰들이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으로부터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두고 보자는 金正日 친필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대북 보고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도 끝도 없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간첩이 아니고, 자기가 북한을 위한 그러한 중앙당 정회원, 또 송두울 씨가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말씀해 보세요.

○國務總理 高建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안 때문에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첩 혐의자로 엄중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처벌받을 것입니다.

○鄭亨根 議員 지금 서울지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 법무부장관의 태도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송두울 씨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면 어떻고 정회원이면 어떻느냐, 김철수면 어떠냐, 그리고 송두울 씨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우리 체제를 선택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보니까 88년도에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 당시 사회과학출판사 ‘이론과 실천’ 대표였던 남편이 검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으니까 판사로서 찾아가서 판사 이름을 단 진정서를 가지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검찰 공안부가 발각 뒤집혀 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꼭 진정서를 내려면 부인 누구누구 이름으로 하라, 왜 판사 이름으로 하느냐, 당신은 공직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원에도 같은 종류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한총련 수배해제하고 그리고 정치국 후보위원이면 어떠냐 이러면서 법무부장관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총리, 저는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식견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법무부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질책을 했고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송두울 씨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의견을 존중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亨根 議員 구속수사하고 구속수사 한 연후에 1심판결 받아서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도 검찰의 고유한 판단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鄭亨根 議員 그러면 대통령하고 법무부장관이 영향을 안 미쳐야지요. 어떻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검찰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鄭亨根 議員 좋습니다.

국방부장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평소 군에서 존경받는 분인데 국군의 날 행사 때 하루종일 우산 들고 따라다니고 태극기 거꾸로 하고 이래서 대단히 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데 요즘 감회가 어떻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비판을 많이 받았습시다.

○鄭亨根 議員 존경하는 장관이,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지나간 일이고……

우선 국방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전방에 배치하고 있는 장사정포 170mm, 240mm가 몇 문이 있고 사정거리는 어떻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

○鄭亨根 議員 이것은 다 알려진 것이니까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국방백서에 발표할 수 있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천여 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0mm의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한 50km에서 60km 그리고 240mm도 한 65km 정도……

○鄭亨根 議員 지금 군사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 장사정포가 사실은 핵이나 미사일보다 더 겁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해서 이것을 쏘기 시작하면 서울 인천이 전부 불바다가 되는데 전쟁이 나도 이것을 제압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鄭亨根 議員 그러면 우리가 남북회담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퍼 주면, 우리가 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거론하면서 왜 이것을 후방으로 보내라든지 이것을 폐기하라든지 하는 주장을

안 합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지금 현재 군사적인 문제를 논의할 만한 정도로 쌍방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도 본격적으로 남북 간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鄭亨根 議員 제가 어제 MBC의 ‘이슈&이슈’에서 이호웅 의원과 송두율 문제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북한이 이제 무슨 위협이 되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운동권 주사와 출신들, 일부 386 출신들이 북한이 우리에게 무슨 위협이나,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핵무기를 가진들 그것이 무슨 위협이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것이 가장 초점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우리가 70만 대군을 전선에 배치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鄭亨根 議員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북한이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북한의 심리전, 일부 전교조의 교육, 일부 우리 방송의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협이 안 됩니까? 북한의 전력이 어떻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명백하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많은 군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고 또 군이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鄭亨根 議員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북한이 전체적인 군사력에 있어 세계 5위입니다. 공군은 우리의 1.5배입니다. 육군은 세계 3위입니다. 엄청납니다. 장사정포가 불을 뿜으면 우리 수도권은 거의 마비됩니다. 그렇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습니다.

○鄭亨根 議員 화학탄이 5000입니다. 이런데도 위협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정훈비 예산 쓰면서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지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국방부는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념적인 혼란을 갖지 않도록 우리 장병들

에 대한 정신교육도 철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鄭亨根 議員 제가 이번에 정보사, 기무사, 국정원 그리고 777부대, 오산 7공군을 둘러보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대응하는 정보능력을 전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을 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군은 미군이 없으면 더듬이 없는 곤충입니다. 완전 깜깜이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주한미군 철수해도 좋다고 하는데 미국이 가고 나면 우리 자체 능력으로서 조기경보 능력이나 북한의 여러 가지 시그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조기 탐색할 수 있는 정보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능력이 제한되지만 저희는 계속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鄭亨根 議員 우리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과문해서 한번 알고 싶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정보능력이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정보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충분한 정보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미연합 능력에 의존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鄭亨根 議員 죄송하지만 저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우산 씌우고 다니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보능력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회의원에게 북한이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분들이 국방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감사합니다.

○鄭亨根 議員 통일부장관님!

북한이 금년 2월 초 8000여 개의 핵 연료봉을 일부 핵 재처리시설로 이동하여 소각 재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5MW 원자로가 가동해 있으며 8000여 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1년에 얼마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50t 정도 나옵니다.

○鄭亨根 議員 50t 정도입니까?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요. 한 24kg?

○統一部長官 丁世鉉 예, 50kg……

○鄭亨根 議員 장관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3년 하면 24kg으로 원자탄 3개 정도, 1개에 7~8kg, 통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과거의 기술로는 1개 만드는데 7~12kg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면 4kg 정도로도 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평가는 있습니다.

○鄭亨根 議員 최근에 2개를 더 만들었다고 미국이 일본에 통보를 해 왔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에 보도되었고, 그래서 도합 4개를 갖고 있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산케이신문은 일본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항상 강경론적 입장에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산케이신문의 기존 논조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지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鄭亨根 議員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난 9월 10일 이후 한 달 이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신변상 주변에 이상이 있다, 또 고영희 소생의 아들 김정철(23살), 김정운(19세)과 성혜림 소생의 아들 김정남(32세) 사이에 권력투쟁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고영희 교통사고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고영희 소생 아들로 한다면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둘째 아들 김정운을 제일 사랑하고 있다고 하고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것은 우선 고영희 소생 아들들은 나이들이 너무 어리고 현재 공식적인 직함이 없기 때문에 권력투쟁설은 너무 앞선 느낌이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여기저기에서 듣는 얘기는 북한 내부적으로 金正日 위원장 자신이 권력을 승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호사가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 내고, 특히 그런 추측성 보도는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鄭亨根 議員 고영희 씨 교통사고설은 어떻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신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亨根 議員 송두울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북한은 가만히 있다가 10월 18일부터 갑자기 노동신문, 중앙통신, 전부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한나라당이 고향을 방문한 독일의 한 사회과학자에 대한 조사를 운운하면서 우리 북을 걸고 드는 소란을 피우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꾸미고 있는 정략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등 계속 비난하고 있는데 돌연히 이렇게 문제 삼고 나온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글썽요,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까마는, 우선 첫째 남북회담 중에도 북측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시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동 중에 실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 그것은 우리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북측에서 간섭하면 오히려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 간섭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경고를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8일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다면 자기들 나름으로는 자기네들과 무관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鄭亨根 議員 이번 장관급회담이 사실상 결렬되었는데 북한이 결렬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관급회담과 관련하여 조성발, 김만길 대표 대신에 최영건, 전중수로 교체했는데 전중수는 상당히 주목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최영건, 전중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최영건은 건재공업성의 부상입니다. 말하자면 경제 전문가지요. 그동안에 북측의 차석대표였던 조성발은 조평통 쪽에서 일어난 대남문제의 이론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가를 빼고 경제 전문가를 집어넣어서 경추위 부위원장이 장관급회담의 차석대표를 하도록 해서 남북관계를 경제 부문에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했다고 보고, 전중수는 그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마는 대일관계의 일선에 있던 전인철 외교부 부부장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자간에 상당히 치밀하게 협상에도 못하고 이론에도 밝기 때문에 40세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을 회담 일선의 대표로 배치를 시켰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관련해서도 남북대화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

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鄭亨根 議員 장관님, 2차 6자회담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저희가 북쪽에 2차 6자회담에 대해서 가능성을 물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2차 6자회담에 빨리 나오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10월 16일 밤에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이 나왔습시다. 또 때가 되면 핵 역지력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이 나왔습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잘렸습시다마는, 세 번에 걸쳐서 강박을 한 결과 북쪽으로부터 의외의 소득을 얻어 냈습시다.

미국이 지금 전혀 만나 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는 데 대해서 주목해 달라, 또 하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미국대사관에도 연락을 해줬습시다마는 “대화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일본은 빠지라고 했던 얘기를 거둬들이겠다는 암시로 보기 때문에 6자회담 관련해서 이번 회담에 비록 문구는 넣지 못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을 결렬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잔에 물이 넘치지 않는다고 해서 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고 다만 그 표현을 이번에는 뒤로 미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亨根 議員 파월 국무장관이 협상안으로 공개적·문서적 다자보장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북한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북쪽은 지금 체제와 관련된 불가침조약을 요구는 하되 장차 여러 가지 국제적 보장이 뒤따르는 체제보장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로 협상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최근에 와서 중시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나머지 5자 사이의 동시조치에 관심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조금만 매듭이 풀리면 그런 보장 형식에 대해서는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鄭亨根 議員 금년 내에 2차 회담 가능성이 있

겠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금년 내에 성사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鄭亨根 議員** 관련해서 지금 김원웅 의원께서도 북한에 두 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개별적으로 북한에 가신 국회의원이 어떤 어떤 분이 있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여러 단체의 고문이나……

○**鄭亨根 議員** 단체로 관광하고 이런 것 말고 개별적으로……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것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대체로 단체들의 방북 과정에서 고문이나 자문위원 자격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밀행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鄭亨根 議員** 저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북한에 초청받아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동감하시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혼자서 가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투명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亨根 議員** 저는 대단히 놀란 것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북한 핵문제와 북한 입장에 대한 목소리와 북한의 목소리와 우리 일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똑같다는 사실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행여 이것이 자칫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에 우리 상층부 또는 우리 의원들이 이용당하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 점을 정부 당국에서는 면밀히 살피고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統一部長官 丁世鉉** 예.

○**議長 朴寬用** 네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副議長 趙富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權**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權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동구를 출신 **沈載權** 의원입니다.

나라가 위기 국면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도 시장 좌판 아주머님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나랏일을 걱정하십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을 비난하며 당을 떠났습니다. 취임 7개월여 만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물어 신중하게 이라크 파병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며칠 전 약속마저 허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위해 헌신해 왔던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심정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정부는 그동안 누누이 여론수렴을 강조해 왔습니다. 총리, 어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 이후에 10월 18일 파병결정이 있기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마는 특히 중동지역 수출 기업인이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10월 17일 시민단체 대표와 재향군인회 간부를 만나기 이전부터 종교계 원로 초청회담 그리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언론사 합동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각종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NSC나 외교부, 국방부에서도 각 부처의 자문위원, NSC 정책자문위원, 국제 전문가, NGO 지도자, 이라크 현지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수십 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특히 민주당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파병 관련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沈載權 議員** 그러면서 왜 대통령께서는 17일 오후에 “파병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내에서 진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내일 처음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그동안에 논의는 여러 번 했지만 가부를 결정하는 무거운 단계의 논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이제는 결정할 단계에 왔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파병 문제로 해서 참여한 장관급 회의만 해도 네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沈載權 議員** 총리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그런 말을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 바로 국정을 혼란케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리의 결의를 활용해서 서둘러 파병 결정하는 그 과정 또한 당당치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파병 부대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대단히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총리, 왜 하필이면 우리는 모술 지역으로 파병이 됩니까?

○**國務總理 高建** 모술이 유력한 후보 지역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파병하는 지역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沈載權 議員** 이미 모술로 파병될 것이 공표되고 있는데 총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모술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沈載權 議員** 그러면 파병 지역을 놓고서 미국과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파병 지역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沈載權 議員**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일본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부대들은 전부 더 안전한 곳으로 평가되는 이라크 남부 지역에 주둔지를 택한다고 합니다. 왜 모술이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정부와 어떤 의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분명한 것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파견 지역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앞으로 현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沈載權 議員** 총리,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하루이틀 후에 모술로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國務總理 高建** ……

○**沈載權 議員**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파병 부대의 성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라크 전쟁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잘못된 전쟁이며 어떠한 안보리 결의로 포장되더라도 이러한 잘못된 전쟁에 우리의 전투병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병 부대의 성격을 놓고 미국에서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미국에서 이라크전 후 재건 과정에 치안유지를 담당할 안정화군을 요청하는데 그 규모는 “독자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 이렇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 성격은 현재 결정을 하지 않았습시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에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성격과 규모와 시기를 한국 정부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沈載權 議員** 성격과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논의 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선 국회에서도 조사단이 갑니다마는, 정부에서 2차 조사단이 다녀온 뒤에 그 조사단의 결과보고와 함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沈載權 議員**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지금 어떤 성격의 군대를 파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직 열려 있는 장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렇습니다. 다만 파견 부대의 성격은 평화·재건 지원 부대의 성격을 갖되 역시 자위적 차원의 기능은 부수적으로 불가피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沈載權 議員** 어떤 부대가 가더라도, 이를테면 간호 부대가 가든가 의료진이 가더라도 자위 부대는 같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투 임무에 종사하기 위한 병력인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國務總理 高建** 현재로서는 성격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沈載權 議員 우리 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전투병으로 요청받고 있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비용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가진 자료를 보니까 미국조차도 재건 지원비의 절반을 추후 석유로 되받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년간에 걸쳐서 2억 또는 2억 5000만 불 정도의 재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미국조차도 이렇게 반이나 되는 것을 석유로 되받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얼마나,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이라크에 추가파병 비용은 다국적군 비용부담의 원칙과 전후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각국마다 입장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제적 능력이나 한미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고려해서 파병에 따른 비용부담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沈載權 議員 파병에 따른 비용은……

○國務總理 高建 일본은 50억 불을, 지금 전체 비용을 부담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는 2억 6000만 불과 파병에 따른 소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沈載權 議員 파병 비용, 재건비, 또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어떤 것 하나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라크에 파병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 관계를 들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6·25 때 미국이 주었던 도움, 또 그동안에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줄 미국의 도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미국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더라도 지금 우리 안보를 두고 많은 현안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라든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라든가 용산기지 또는 미 2사단 이전 문제 등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파병 문제를, 설령 한미동맹 관계를 문제로 놓고 본다고 할지

라도 이런 문제들과 연계해서 하나하나 의견을 나누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이런 안보 현안을 두고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한다고 할 때 미국은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파병을 통한 한미동맹 관계가 유지, 강화가 되면 그러한 강화된 한미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나 한반도 내에 있어서의 전쟁, 주한미군의 전쟁역지력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연계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영향을 주리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沈載權 議員 지난번에 이라크에 비전투병 파병하고 난 후에, 그때도 얼마나 반대 여론이 많았고 여러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또 그때는 더더욱이 안보리 결의도 없고 해서 명백히 침략전쟁에 대한 지원이다라는 국제적인 비난도 받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이를테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환조건식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미 공조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마·서희 부대의 1차 파병으로 인해서 한국 인도적 지원 부대의 사업에 대해서 이라크 주민들로부터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載權 議員 이라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지요. 또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바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안보 현안문제들과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정부의 자세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신문에 보도되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마치 예의에라도 벗어난 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냉정하고 치열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얻어 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국익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처만 기다리겠다라든가 전체적으로 동맹 관계가 좋아짐으로써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한미동맹조정회의가 지난 4월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지난

10월 초순 5차 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한반도 방위군이 아니라 지역군으로 바꾸기로 우리도 양해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사실과 다릅니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1차 회의에서 5차 회의까지를 통해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지역군 확대를 요청했거나 우리 주한미군의 지역군으로의 변화를 우리가 양해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충분히 부인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기본 역할을 한반도 전쟁 역지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미래적으로 지역 역할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할 수는 있다는 견해를 서로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沈載權 議員** 총리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현재까지의 진실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역군으로 바뀌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새롭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면서 미국 측으로부터 감군에 관한 요청이나 의논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감군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른 전략 개념 전환의 일환으로 한반도 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미동맹조정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과 재배치 관계입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110억 불에 해당하는 전력증강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념상으로 인력은 다소 감축될 수 있다는 개념은 서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협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沈載權 議員** 총리 말씀은 조삼모사식의 답변이십니다. 지금 주한미군 감축 자체를 의제로 해

서 우리가 미국과 의논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한 미 2사단 재배치 과정을 통해서 여러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바는 이미 미군은 감군을 결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만 적절히 발표 과정만을 남기고 있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보셔야지요.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재배치 등등의 문제를 놓고 보도에 보면 국방부장관께서는 30억 내지 5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그렇습니다.

○**沈載權 議員**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용산기지 이전뿐만 아니라 미 2사단 이전까지 포함해서 30억에서 50억 달러라는 것입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30억 내지 50억 달러라고 말씀드린 것은 용산기지 이전을 말씀드리고 있고……

○**沈載權 議員** 용산기지만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주한 미 2사단 이전은 원칙적으로 미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전에 따르는 비용은 토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미 측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載權 議員** 저는 장관의 답변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들을 살펴보니 이미 미 의회 회계검사국의 1993년도 개산에 의하더라도 17억에서 95억 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2003년, 10년이 지난 지금의 개산으로는 이것을 10배 정도 더 크게 잡아야 옳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 당시에는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는 볼 수 없겠고, 현재는 용산기지를 이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기획단에 의해서 판단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는 30억 내지 50억 달러의 비용이 비교적 정확한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沈載權 議員** 이 한미합의각서 소위 말하는 MOA 그리고 한미양해각서 MOU에 따르면 우리 측이 용산기지 이전에 있어서 무한대의 부담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 알고 있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가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이미 90년도에 합의가 됐습니다.

○沈載權 議員 한마디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시설, 용역, 서비스에 관련된 분야까지도 전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 알고 있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시설, 용역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沈載權 議員 시설 용역 서비스 분야, 이를테면 용산기지 내에 있는 서비스업체가 한 달 동안 영업을 못 한다 그러면 그 영업을 못 한 비용까지도 우리가 물어주겠다는 것입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것이 90년도에 한미 간 합의됐던 약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느라고 지금 5차까지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沈載權 議員 장관 어찌 답변이 그렇습니까? 아직 수정도 안 된 그런 MOA, MOU를 놓고 30억에서 50억 불밖에 들지 않는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런 것 저런 것을 현재 상태에서 계산해서 답을 해야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저희 실무선에서는 30억 내지 50억으로 판단을 했는데 현재……

○沈載權 議員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MOA, MOU에 따른 비용을 30억~50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다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담하는……

○沈載權 議員 MOA, MOU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50억 불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습니다.

○沈載權 議員 그렇게 안 되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현재 제 판단이나 또 최근에는 그보다 약 10억 불 정도를 더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沈載權 議員 장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러겠습니다.

○沈載權 議員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국무총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MOA, MOU는 위험적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MOA, MOU가 집행되기 이전에 반드시 국회의 심의와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간 비방·저지 방송 중단이 대단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시간 관계상 자세히

여쭙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지난 냉전시대의 비방·저지 방송을 우리도 하고 있고 또 북한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KBS 또는 북한 측의 중앙방송을 상호 청취하도록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7개월여 만에 우리의 국정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60% 안팎이나 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미숙한 국정운영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盧武鉉 대통령 당선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헌신해 왔던 우리 민주당은 참으로 참담한 심경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재신임을 물어 국정 난맥상이 말끔히 가실 수만 있다면 백번이라도 재신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신임이 국정미숙을 바로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국정운영은 연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기일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쇄신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富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균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사오정·오륙도로 표현되는 중장년층의 불안한 노후 문제, 자살을 선택하는 도시빈민 계층, 불안감과 박탈감에 가슴 타는 농민들, 도대체 이 땅의 어느 계층과 세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비전의 기대감으로 탄생시킨 참여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 난과 직전의 표류하는 배처럼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는 희생의 기미가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도덕적 해이가 범람하며, 과병과 북한 핵 협상은 명쾌한 결정 없이 끌려 다니는 동안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나라 전체가 어느 한곳 온전하지 못한 채 안희정, 노건평, 이기명, 염동연, 양길승, 이광재로 이어지는 측근 비리형 도미노 게임이 정녕 최도술

에서 끝나 주기를 진정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회는 국무총리의 능력과 자질을 믿고 총리를 인준하였습니다. 오랜 공직의 경험과 경륜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혼란 없는 안정된 정부가 되게 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믿고 선택한 국무총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한계상황을 드러내며 오늘의 총체적 파탄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탄과 도덕성 붕괴는 내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진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 당선 후 측근들이 거액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 자체만으로도 이 정권에 도덕적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서 재신임 때까지 인적 쇄신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조속한 인적 쇄신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신임을 제의한 현시점에서 더욱이 국회 예산심의와 개혁입법 그리고 민생안정 등 산적한 국정수행의 차질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치권에서 재신임 절차의 정치적 합의를 위해서 그리고 초당적인 국정협조를 담보하기 위해서 내각의 쇄신, 개편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총리로서는 정치권과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시균 의원**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충격과 혼란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과 번영을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나라가 위기 상황을 향해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치닫는 상황에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이처럼 불안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IMF 때에도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고통은 크지만 그래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신임 발언은 누적된 측근 비리와 정

치적 무능력을 은폐하고 위장하기 위한 승부수이며, 나아가 내년 총선을 대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측근인 최도술 씨 사건으로 충격이 워낙 컸고 참여정부의 자부심인 도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마땅히 국민에게 재신임을 물어야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시균 의원** 변함없는 판단입니까? 변화는 없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변화요? 변화라고 말씀하십니까?

○**박시균 의원** 예, 재신임 판단에 변함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균 의원** 盧 대통령 자녀 결혼식을 전후해서 최도술 씨가 11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은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축의금이 더 많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내역을 공개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최도술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철저히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 명확하게 밝혀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시균 의원** 또한 매번 그랬지만 재신임 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타결하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행위가 정치적인 것인데 이런 발언을 한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으로서 재신임 문제를 빨리 조속히 매듭지어서 정국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정치권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서 조속히 추진해왔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정연설에서도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이

미 제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박시균 의원 이라크 파병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미국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에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유엔 결의가 파병의 명분을 제공한 것이니까 이제 정부는 실익을 얻기 위한 파병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정권이 하도 여러 번 번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우이길 바라면서 묻는 것인데 혹시 파병 결정이 번복될 일은 없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현재 결정된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시균 의원 이번 파병은 국익과 한미 공조 문제 그리고 유엔의 결정이 고려된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고려해서 했습니다.

○박시균 의원 그렇다면 국익과 한미 공조라는 배경에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렇게 교환조건식으로 연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나 한반도의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미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서 한미동맹 관계가 공고화된다면 역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도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시균 의원 한미관계에서 파병 문제와 북핵과 6자회담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농사꾼이 농사일과 소 키우는 일이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파병 결정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불과 1주일 전 이 자리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결코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발표 하루 전날 시민·종교 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내에서 진지한 논의가 없었고, 언론의 추측성 보도는 부정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없이 진지해야 할 신중한 문제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도 되는 것인지, 또 오늘날 이런 혼란이 그것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다.

하루 만에 말이 바뀐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주재한 이라크 파병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롯한 장관급 회의가 네 차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9월부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요소들을 치밀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요소를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만 했지 가부 결정하는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벼운 논의만 해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요소들을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가부를 결정하는 무거운 단계의 논의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는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가부를 결정할 단계가 되었다’ 이 뜻인데 어휘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시균 의원 국정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총리에게 상의한 적이 흔히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자주 있습니다.

○박시균 의원 그리고 당초 미국의 요청은 폴란드형 사단병력으로 우리의 여단병력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만 3000여 규모의 정규 사단병력이라고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인터뷰에서 밝혔 습니다. 그 후 어제부터 1만여 명의 규모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보에 관해 공개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파병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 했던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이며, 또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정확한 것인지,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파병 규모는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현재 파병 규모는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미 측의 요청은 독자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경보병 부대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폴란드형 사단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군이 다국적군의 사단을 지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규모나 병력 수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나는 6000

명, 1만 명, 이런 얘기는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현지조사단의 조사보고와 우리 국군의 특성, 또 앞으로 파병하는 평화·재건 지원 부대의 기능과 주둔지역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박시균 의원 미국과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파병을 동의하고 규모도 대충 상의된 바가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박시균 의원 그리고 이라크 현지로 가는 지원 병력에 대한 개인별 지원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1인당 말씀이십니까?

○박시균 의원 예.

○國務總理 高建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장관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균 의원 언론에 보면 사병은 200만 원, 장교는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금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박시균 의원 국민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 믿음직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만큼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국민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조금 전에 총리한테 물은 이라크 파병의 지원 병을 어느 정도 보낼 예정입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지원병 말씀입니까? 아직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박시균 의원 그러면 사병은 200만 원, 장교는 300만 원이란 것이……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것은 파병수당입니다.

○박시균 의원 수당입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그것은 동티모르나 어디나 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박시균 의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박시균 의원 북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폭장치를 개발했거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하며, 실제로는 8000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5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재처리를 하면 그 정도는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시균 의원 북한이 이미 2, 3개의 핵을 보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약 10~12kg을 재처리해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한미 정보 당국 간의 공통된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기화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추적을 해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균 의원 일반적으로 모든 군사 전문가 얘기는 2~3개는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더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시균 의원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한미 수평관계 정립을 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였고,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 연내에 조속히 매듭지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에 따라 주둔 미군이 이제 재배치를 통해서 기동 전략·전술로 전향하려는 계획이 안보 공백과 외교적 파장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미군이 기동전략으로 전환한다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한미 간에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재배치 문제는 사실 작년 12월부터 이 문제가 합의되어 가지고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반드시 현 정부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시균 의원 91년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엄청난 불평등조약으로 강화조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미 양해각서만큼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은 뒤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되는 대로 MOU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시균 의원** 꼭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5조를 상회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산하는 이전비용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 실무진 선에서 판단한 것은 30억~50억 불인데 그동안 구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약 10억 불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균 의원** 국방부 예산이나 국방부의 정보가 제가 보기에는 참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비용과 기준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엄청난 불평등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심지어는 미군이 고용한 노동자의 이주비까지 부담하는 이전조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90년도에 합의했던 MOU상에 보면 기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권이라든지 영업상의 손실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재협상해 가지고 현재 상당 부분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시균 의원** 한때 용산기지의 평택·오산 이전설이 나오면서 현지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

○**박시균 의원** 그 후 용산기지 일부를 대구 캠프 헨리로 이전한다는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이전하는 부대 중에서 미 육군의 군수지원단 등에 병력이 약 7, 80명 되는데 그 인원은 원래 대구에 있는 캠프 헨리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구로 가는 병력은 없습니다.

○**박시균 의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한다. 규모는 3분의 1

또는 1만 2000명이라고 하며, 잔류 미군 병력은 아태지역 전략을 위한 원정군 성격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미 합참 피터 페이스 차장과 전 한미연합사령관인 로버트 리스카시도 주한미군 감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핵 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게 미군 감축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언제 알게 되었으며, 그동안 미국 정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해서는 한미 국방 당국간에 한 번도 정식으로 제안되었거나, 또는 지금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AP통신에 그런 것이 나왔었지만 미 국방성 대변인이 바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균 의원** 이미 미국은 방침을 정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감축에 관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민이 정부와 국방부를 어떻게 믿으라고 하시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불안한 안보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이 두려워서 숨겨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라크 파병으로 인하여 전투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안보 공백의 대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우선 감축문제는 미 측에서 만약 저희에게 공개적으로 제의를 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감출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것은 국회에도 보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일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서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규모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위협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군 의원** 내용을 잘 알면서도 국방부장관이 국민에게 혹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거짓말을 해야 될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박시군 의원** 장관님, 마지막으로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쌀 비료 시멘트 옥수수 등 엄청난 물량을 지원하면서 북한 달래기에 정성을 쏟아 왔습니다. 또한 북한은 말로만 ‘통일,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확인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을 학습하며 세뇌당해 온 사람들의 실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저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군은 모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시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인들은 먹고 남은 식량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 돈벌이를 하고, 쌀 싣고 가는 한국 배는 태극기를 내려야 하고, 북측은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이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뱃속과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월간조선 10월 호입니다.

○**박시군 의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식량이 적화통일을 위한 군량미로 둔갑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4명의 조사단이 하는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북한의 속임수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우선 군인들이 남은 식량을 장마당에 내다 팔았다는 얘기는 추측에 불과하고, 싣고 가는 배에다가 태극기를 내리게 된 것은 95년 金泳三 대통령 때 쌀 지원을 시작하면서 그때 남북 간에 합의한 관행대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을 수 없지요.

그다음에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

는데, 아까 질문하실 때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이 5명의 현장확인단이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자를 인도하는 사람들한테…… 선원이나 하역인부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 대신 남쪽에서 온 쌀이 풀기는 좀 모자라지만 정성으로 보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다” 풀기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99년, 2000년, 2~3년 된 쌀이기 때문에 풀기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군인들이 내다 판다고 그러는데 군대에서 필요한 양은 117만 명 곱하기 365일 곱하기 800g씩으로 해도 34만t이면 됩니다.

북한이 아무리 쌀이 모자라지만 자기네들이 자체 생산한 새 쌀이 1년에 170만t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쌀을 북한 군인이 먹는다고 그렇게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선군정치이기 때문에 북한군한테는 새 쌀을 주겠지요.

따라서 군인들이 내다 판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보낸 ‘40kg 쌀’, ‘대한민국 쌀’이라고 표시한 쌀 포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용도로…… 제가 알기에 그 포대만 4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갖가지 담아 가지고 이동에 쓰고 있고, 군인들이 무슨 작업을 할 때에도 자기의 도구나 장비를 거기에 넣어서, 말하자면 운반수단으로 쓰고 있다, 자루로 쓰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외형만 가지고 전용으로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박시군 의원** 장관께서는 월간조선의 보도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봅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괴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시군 의원** 마지막으로 남북자 귀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9월 6일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 확인 실시를 합의했으나 휴전 이후 남북자 생사 확인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적십자사도 계속해서 남북자 생사 확인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북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작년 9월 6일 남북적십자 총재급 회담에서 북한이 약속한 것이 전쟁 시기

에 행방불명된 자(국군포로입니다) 생사 확인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놓고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1년이라는 시한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국군포로 문제에까지 북한을 끌어냈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다음 단계로 남북자 문제를 추진하려고 계속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평양에 가서 제12차 장관급 회담을 하면서도 북쪽이 약속한 국군포로 생사 확인문제와 전쟁 이후 남북자 486명에 대한 생사 확인사업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북쪽은 자기네들이 아직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빠뜨리지 않고 계속 문제를 촉구함으로써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끌어내려면 여러 가지 대북 지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대북 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시균 의원 통일부장관님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副議長 趙富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근 의원입니다.

지금 저보다 앞서 한 박시균 의원님의 대정부 질문을 듣다 보니까 내용이 합리적이고 비록 저와 당이 달라도 잘했다는 소리가 속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의 근거 없는 폭로와 색깔론에 대해 제가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할 때 한나라당의 모 의원께서 “신당 창당 기금으로 부산 지역에서 400억을 기업인들에게 조성했다”고 근거 없는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을 나와서 신당을 하고 있지만 신당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월급 탄 것 꼬박꼬박 모아서 1600만 원 내고, 은행에 2000만 원 대출받아서 창당자금으로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이지 과거에 하듯이 기업의 돈을 뜯어서 하는 것이 우리 신당

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金武星 의원께서 “국회 내에 친북세력이 잠입했다” “유시민 의원이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방문해서 무슨 자료를 받아 왔다” 그런 황당무계한 폭로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면책특권의 그늘에 숨어서 책임이 없는,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심세력이 정부 내 핵심으로 포진해 있다고 확신한다.”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핵심세력으로 컨트롤, 미화·찬양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 “2003년에는 7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밀입북 경험을 갖고 있는 요주의 인물이 3급으로 채용됐다.”

아니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 놓고 발언한 다음에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러한 부끄러운 정치인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를 다시 한번 뒤져 보면 “민주당 韓和甲 대표가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10월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8월 15일 방북하고 이를 위해 30만t의 대북 식량 지원과 금강산 해수욕장 개발비 80만 달러 등등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일명 도라산 프로젝트설……

2002년 8월 15일에 韓和甲 그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돈 지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국회의원을 그만두거나 해야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면책특권의 그늘에서 곤충처럼 서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金大中 대통령과 민주당이 북한 노동당 2중대였다면 盧武鉉 정권이 되면 북한 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 金正日이 낮은 단계의 지배를 넘어 아예 남한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 신북풍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것처럼 포괄적으로 근거 없이 색깔 논쟁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근거 없는 폭로행위는 국회에서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경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색안경입니다.

(색안경을 쓰면서)

요새 이효리가 즐겨 쓰는 빨간색 색안경입니다. 이 빨간색 색안경을 쓰면 모든 사물이 빨갱게 보입니다.

지난 7월에 법원에 의해서 42억 보상 판결을 받은 수지 김 가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빨간 안경을 쓰고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면 모두 다 간첩입니다. 수지 김도 지금도 간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총리 이하 국무위원도 다 간첩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을 쓰고 있는 이상 지금도 수지 김을 비롯한 그 가족을 고문하고 조작하면 간첩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시민단체에서도 이러한 국회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각 의원들의 속기록을 뒤져서 근거 없는 발언을 한 의원들을 차기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90년 6월 25일 李相薰 국방부장관과 메네트레이 주한미군사령관은 용산기지 이전 관련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91년 5월 20일 SOFA 합동위원회에서는 두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합동위원회 서명일을 정식조약 체결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91년 5월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라고 확인·서명한 우리 측 대표자가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리 측은 潘基文 당시 외무부 미주국장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로널드 포글만 주한미군 부사령관입니다.

○안영근 의원 潘基文 그 당시 대표는 지금 청와대 외교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안영근 의원 그런데 이 조약을 보면 불평등하고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라고 인정한 사람이 현재 청와대 외교보좌관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한미군 이전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1990년도에 합의서가 체결되고 그 효력이 인정되었던 것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그것을 기초로 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기인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바로, 용산기지가 서울에 있었는데, 제가 서울특별시장이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미군 용산기지가 도심에서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앙정부에서 미군이 희망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기지를 이전해 달라,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것이 그때의 MOU, MO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측은 용산기지 이전을 희망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측의 이전 요청에 의해서 이전합의각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합의각서를 지금 보니까 불합리하고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변경시키고자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교섭에 임하고 있고, 거의 다 개선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영근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께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합의각서 관련 대책 필요’라는 그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의 보고문건을 보신 적이 있지요?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안영근 의원 외교부에서는 본 적 없습니까?

외교부장관이 여기 안 계시니까 차관, 본 적이 없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본 적이 없습니다.

○안영근 의원 본 적이 없으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에 작성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합의각서 관련 대책 필요’라는 제목의 안기부 정세보고문건, 이것 청와대에 보고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번 합의각서의 미 측 실제 서명권자인 포글만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5월 13일 潘基文 미주국장을 방문하여 외교부 내에 동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이 있는데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고 하며 동 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 즉 미군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88년 7월 ‘주한미군 숙소로 무상대여한 내자호텔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48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 온 유광석 미주안보과장이 미군 측의 로비로 일본으로 전보된 바 있어 潘基文 국장도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조적 분위기마저 산견되고 있음”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당시 91년도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國務總理 高建 저는 처음입니다.

○안영근 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 포글만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潘基文 외무부 미주국장에게 강요해서 서명받은 내용이 바로 영문으로 된 이 문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내용이나 하면 “동 합의각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나 李相薰 장관과 메네트레이 사령관이 서명을 필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추었으며, 그러나 현재 국방부와 외무부 일각에서 동 각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학계(서울대 백충현 교수)에서조차 위헌성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만간 야권, 언론, 대학가, 재야단체 등에 인지됨으로써 합법성 시비와 함께 반미 감정 유발 등 새로운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동 각서 서명 절차가 외부에 노출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에 유의함과 동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이미 위헌성 논란이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1990년 연말까지만 서울특별시장이었습니다.

○안영근 의원 제가 총리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원래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총리께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예.

○안영근 의원 그러면 그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의 표현대로 위헌성이 짙다고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제가 아직 할 수는 없는데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당시의 MOA에 불합리한 부분이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미 간에 교섭을 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영근 의원 우리나라 헌법 제60조제1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구하지 않고, 1991년에 서로 간에 조약한 MOA와 MOU의 조약이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합헌으로 볼 수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새로운 MOA가 이루어지면 그때 국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도록 그런 절차가 취해지겠습니다.

○안영근 의원 올해 7월 제3차 한미동맹조정회의 준비 과정에서 정부 일각에서도 1990년의 합의각서 및 이행각서가 위헌이며, 사후 추인 역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북미국과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을 속여 예산 따 내는 데에만 골몰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 국방부 정책실장과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기존 합의서의 핵심적 내용을 포괄 협정에 반영하고, 세부적 내용의 부록은 따로 만들며, 포괄협정만 국회로 가게 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魏聖洛 북미국장은 회의 초반에 “1990년도 합의서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미국 측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국민 정서에 맞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할 자신이 없습니다.

○안영근 의원 저도 안타까운 것이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나왔으면 좀 확실하게 하는데 지금 안계셔서 총리께 여쭙어 보니까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

○**國務總理 高建**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근 의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따로 여쭙어 보는 것으로 하고 바로 이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라크 추가 파병을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추가 파병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심을 포기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폐기에 진전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다자틀 내에 어떻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정도가 거기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부시 대통령이 일본이나 다른 데에서 얘기하던 것하고 지금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추가 파병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이라크에 대한 추가 파병과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직접 조건부로 연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라크 파병으로 해서 한미동맹 관계가 공고화되면 그 공고화된 한미 공조체제 위에서 결국 6자회담에 있어서 미국 측의 비타협적이었던 태도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시의 발언과 며칠 전에 한 파월의 안전에 대한 공개적·다자적 문서 보장하고 맥이 통하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안영근 의원** 그런 공동발표문은 이전에도 부시 대통령이 얘기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면서 병력을 파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미국의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만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한미동맹 속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한다는 것은 좀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한미동맹 기반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위

에서 간접적으로 다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1 대 1 교환조건으로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영근 의원** 지금 이라크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1일 평균 22회의 게릴라 공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일 평균 2~3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사가 약 1만 명이 파병될 경우에 약 5일에 1명, 그리고 하루에 약 두세 번의 공격을 받는다는 평균치가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한 위험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수니 삼각지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합니다. 그러나 삼각지대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영근 의원** 안전지대라고요?

○**國務總理 高建** 안정화 추세에 놓여 있다,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영근 의원** 안전 지역이면 전투병이 아닌 비전투병을 파병해도 전혀 관계가 없겠네요?

○**國務總理 高建**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전투병이라 하더라도 파병부대가 자위적 차원의 무장이라든지 소요를 진압하는 최소한의 무력은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비전투병이나, 전투병이나, 어느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영근 의원** 그러면 파병을 하기는 해도 나중에 군대를 철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안영근 의원** 그러면 철수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역시 유엔 안보리 의결에서도 암시가 되었듯이 이라크의 치안이 완전히 유지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작동되는 시기에는…… 언제가 될는지 그러나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근 의원** 그러면 철수할 때 우리 독자적으로 철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유엔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國務總理 高建** 승인받을 일은 아니지만 유엔 의결 승인하의 다국적군이기에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근 의원**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들어가시고, 외교부 차관께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

다.

파견된 군인이 철수할 때 철수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그것은 유엔 결의상 이라크 새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다국적군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근 의원** 그리고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라고 있지요?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예.

○**안영근 의원** 거기에 내각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예.

○**안영근 의원** 거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이라크 가버닝 카운실(Iraq Governing Council)하고도 필요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가버닝 카운실의 경제 담당하는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안영근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아까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비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사에 대한 모든 비용, 그리고 PX뿐만 아니라 각종 이사에 대한 비용, 그리고 손실비용까지 보전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합산하게 되면 이전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리라고 예상합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1990년도에 체결되었던 MOU, MOA상에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1990년도에 체결된 두 문건이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한쪽에 치우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입장이 반영되고 있고 또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께서 30억 불에서 50억 불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액수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영근 의원** 그러면 제가 협상을 잘 하시라는 뜻으로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가 했던 보고서를 보

면 “심지어 번역료 등 행정경비까지 전액 부담하는 등 지극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바 동 각서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제 부담해야 할 소요경비는 애초 예산을 월등히 초월하여 최대한 4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것은 96년도 이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는 사실 미국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고, 지금의 국가정보원과는 상당히 틀린 조직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 정도면 저는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관께서는, 특히 외교부팀께서는 주한미군 이전에 있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우리의 국가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알겠습니다.

○**안영근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趙富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哲賢**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哲賢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權哲賢**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 위기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집권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의 지지도는 10%선대로 떨어지고, 정치·경제·국방의 위기로부터 정체성의 위기, 통합의 위기, 도덕성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는 **盧武鉉** 대통령을 보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고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결정도 국정 혼란과 비리 의혹을 일거에 잠재우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치졸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盧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도술 씨의 구속을 개인의 비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빚을 갚는 데 쓴 돈이라면盧 대통령의 책임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盧 대통령이 급한 불을 끄려고 재신임 투표라는 희심의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본인의 비리 연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權哲賢 議員 대통령 자신도 ‘자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20년 동안 측근으로 있던 사람의 도덕성 훼손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權哲賢 議員 그렇다면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해야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검찰에서 법대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결심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흔들리는 이런 중대한 결정조차도 총리에게 논의는커녕 사전 통보조차 해 주지 않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이盧 대통령 개인의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보면 대통령으로서 자기 측근 비리로 인한 재신임 결심을 했기 때문에……

○權哲賢 議員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면 됐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대통령께 최도술 씨 사건을 9월 초에 보고했다는데 총리는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10월 초순 언론에 보도된 직후에 개략적인 사건만 보고받았습니다.

○權哲賢 議員 총리께 묻습니다.

재신임 발표 과정에서, 최도술 보고 과정에서도 총리는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총

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도술 사건은 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느냐 하면 대통령의 측근인 총무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개별 보고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그렇지 않지요. 최도술 사건이 알려지면 세상이 떠들썩할 텐데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검찰의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權哲賢 議員 참으로 형편없는 정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총리 안 하겠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검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저는 보고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權哲賢 議員 만일 대통령이 진상을 은폐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필리핀의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 도청행위 그 자체를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행위를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로부터 이런 도덕성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질책을 받고 결국 하야하고 말았습니다.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자질 시비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지만 무능력과 부정부패로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盧武鉉 대통령에게 시사하는 바는 큼니다. 제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도술 씨의 비리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하고 오히려 총선 준비를 시킨盧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닉슨 대통령이나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盧 대통령의 경우 측근의 비리로 인해서 새 정부 전체의 도덕성에 훼손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

○權哲賢 議員 닉슨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니까?

자신의 부하의 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다가 언론에 터져 나오니까 하늘이 깜깜했다고 하는 그 도덕성이 국민들한테 본이 되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

○權哲賢 議員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님은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국정 혼란과 권력 비리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든지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든지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비겁하게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퇴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신임 투표라는 도박판을 벌여 가지고 국정 실패와 부정부패를 일거에 덮겠다는 의도라면 님이나 에스트라다 대통령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총리께서도 님과 에스트라다의 사례를 잘 알고 계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權哲賢 議員 盧武鉉 대통령과 비슷한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盧 대통령이 순리대로 위기를 수습할 것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현시점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재신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權哲賢 議員 대통령 정도 되어서 내가 물러날 때인가 아니면 더 해야 될 때인가 그것도 몰라서 국민들한테 물어봅니까? 그런 판단 능력조차 없으면 진짜 그만두는 것이 옳지요.

저는 정말 개과천선하고 새로 심기일전해서 한번 더 하겠다고 국민 앞에 하려면 하시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왜 국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國務總理 高建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근의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앞으로 국정운영을 쇄신하겠다고 하는 뜻을 재신임에 묻는 것입니다.

○權哲賢 議員 송두울 교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비정상의 전성 시대입니다.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확대를 향

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역류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대는 애국적·민족적으로 칭송되고 세계사의 흐름에서 완전히 이탈해 있고 극단적인 비정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비판을 가하면 친미·냉전·수구 세력으로 매도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근대화 과정의 중심에서 있었던 입장에서 작금의 이러한 국가상황이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는 가운데 사회 발전 과정의 한 단면이라고도 이해가 됩니다.

○權哲賢 議員 걱정이 되지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걱정이 됩니다.

○權哲賢 議員 걱정이 되신다면 어떤 조치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성숙도로 보아서……

○權哲賢 議員 이것을 하나의 국가 발전 과정의 통과의례로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진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이것을 위기로 봐야지 통과의례로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리 사회 전체가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슬기로운 방안이 무엇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립적인 사고와……

○權哲賢 議員 됐습니다. 대통령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에 송두울 교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송두울은 자신을 남과 북의 ‘경계인’으로 묘사했습니다마는, 이른바 해외 민주인사들의 귀국을 주도해 온 高泳壽 씨가 원장으로 있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대로 하면 송두울은 경계인이 아니라 남한 지식인 포섭의 도구로 활용된 확실한 북한

의 핵심요원이라고 합니다.

총리께서도 송두울 씨가 경계인이고 분단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 문제는 현재 검찰이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 밝혀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선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송두울 씨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후 간부로 활동한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그보다도 총리 개인의 소신이 어떠한지 이것입니다. ‘나는 경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분단의 희생양이 아니라 분단을 획책하는 사람이다’라든지……

○**國務總理 高建**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총리가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는 제가 보고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權哲賢 議員** 송두울 씨는 2001년 5월에 모 시사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최초 방북 시점을 1991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973년에 첫 방북을 했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동당 입당 등 숨기고 싶은 사실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지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송두울 씨의 언행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두울 씨의 행적과 주장에 대하여 신뢰하십니까? 그의 노동당 포기가 진정한 전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최종적으로 전향 여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밝혀지겠습니다만, 제가 어제까지의 보도를 보면 검찰로서는 아직 전향으로 판단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哲賢 議員** 이렇게 전향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송두울 자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 인사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공지의 간첩 혐의자를 민주인사로 조작·미화하는 공영방송, 국민의 혈세로 간첩을 초청한 국가기관의 행태, 심지어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 등은 송두울의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송두울에게 면제부를 주기로 하고 입국을 기획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로버트 김을 구속하고 온갖 탄원에도 불구하고 강력 대처하는 모습과 한국 정부

가 최대의 간첩 송두울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면 국가보위라는 측면에서 이 정부는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盧武鉉 대통령과 몇몇 장관들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의 송두울에 대한 변호 행위가 정부 고위인사로서 올바른 태도이며 이 사람들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이면 이 나라에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범법자를 옹호하는데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權哲賢 議員**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저도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첫째는 엄정한 법에 의한 처벌, 두 번째는 이 송두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이 들끓는 이념논쟁과 국론분열이 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權哲賢 議員** 대통령의 발언도 잘못된 것이지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金大中 정부 때는 송두울의 입국을 반대했는데 어떤 경위에서 盧武鉉 정부는 송두울의 입국을 허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부 내의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송두울 씨의 입국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송 교수의 입국 과정에 어떤 역할도 한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權哲賢 議員**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유엔 결의가 있자마자 그동안 말하던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파병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사실상 파병을 결정해 놓았으면서도 국민들을 속여 온 데 있습니다.

조사단의 결과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조사단을 보내지 않고서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을 봐도 정부의 방침은 이미 결정돼 있

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盧武鉉 대통령은 파병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점에서 뭐가 좋아졌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고려 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을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했는데 뭐가 좋아졌기 때문에 결정했느냐고요.

○國務總理 高建 ‘고려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權哲賢 議員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지요? 똑같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마는……

○權哲賢 議員 똑같은 상황인데 왜 결심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이라크 파병 결정은 그동안의 여론수렴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국익, 한미관계, 안보리 결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했습니다.

○權哲賢 議員 우리 기업의 이라크 미수금이 약 12억 달러라는 것을 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11억 불로 알고 있습니다.

○權哲賢 議員 우리 기업의 이라크 미수금 회수 대책, 이라크 복구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습니까? 이번에 파병하면 11억 달러 미수금 받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직접 교환조건은 아니지만 미수금의 회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재건 사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權哲賢 議員 철저히 연계시켜서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나라 통일이 앞으로 몇 년 후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20년 후라는 사람도 있고 빠르면 10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10년 내에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한 20년이면 되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

○權哲賢 議員 한 나라의 총리로서 그런 예견도 없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답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權哲賢 議員 전혀 생각이 안 됩니까?

○國務總理 高建 지금까지 전문가들한테도 10년 후라든지 20년 후라든지 30년 후라든지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權哲賢 議員 金大中 대통령 때 한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잘 모르겠습니다.

○權哲賢 議員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 환상을 우리한테 많이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통일한국의 수도로서 지금 수도 이전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통일이 되고 나면 수도를 또 옮기겠습니까, 아니면 통일한국 시대가 오더라도 지금 충청권으로 내려가는 것이 통일한국 시대 수도에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지금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한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 혼잡비용과 불경제는 대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 후의 문제는 저는 그때는……

○權哲賢 議員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겠지요?

○國務總理 高建 아닙니다.

통일되는 초기 단계에는 일용 양쪽에 정부가 있으면서 관리하는 정부가 있다고 생각할 때 당분간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는 양쪽에 다 수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의 단계에는 역시 그때는 다시 또 서울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그제 예를 들어서 20년 후라면 20년 후에 수도를 또 옮기겠다 이거지요?

○國務總理 高建 그때의 수도는 성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權哲賢 議員 좀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려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아닙니다. 이것은 79년에도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총리, 지금 서울에는 외국 공관

이나 외국인 학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북한이 서울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가 내려가면 대통령도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외국 공관들 다 내려가고 외국 공관의 가족들 내려가고 학교 내려가고 서울은 외국인들이 텅텅 비는 곳이 됩니다. 북한이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서울은 이미 국제적인 경제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공관을 옮겨간다고 해서 외국인이 크게 줄거나 변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경제인 숫자만 해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서울은 행정수도가 옮겨가는 대신에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權哲賢 議員** 외국의 정부 대표들이 무척 많이 존재했을 때 거기에 공격을 잘못해서 사상이 나면 크게 국제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을 다 빼줘 버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또 한 가지는 한미연합사는 그대로 서울에 남아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權哲賢 議員**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는 반미감정이 많이 팽배해 있고, 미국은 또 2사단을 후방으로 보낸다고 하고, 미국의 조야에서는 미군철수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아무런 경제적 대책 없이, 북한은 선군정치(先軍政治)와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자주국방론을 지금 꺼내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자주국방은 기본적으로 70년도 이후부터 우리가 군사력 건설의 목표로 설정해 온 하나의 군사력 증강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주국방의 개념도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權哲賢 議員** 그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미 국방, 미군의 존재 모든 것을 해 놓고 자주국방이라는 얘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 자주국방이지 미국과의 국방 관계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주국방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오늘날에 있어서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자력국방하고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權哲賢 議員** 자주국방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저희가 일차적으로 자주적인 대북 방위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權哲賢 議員** 지금 경제학자들은 약 200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이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려면 적어도 GDP의 약 3.5%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哲賢 議員** 3.5%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4%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약 200조 얘기를 하는데 경제발전에 돈 써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제는 자주국방 할 수 있는 태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일본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에 투자하는 액수가 2100억 불, 약 200조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20조 미만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자주국방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대북 문제만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주변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비에 대한 투자는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그 200조 같은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200조를 단기간에 또는 1~2년간에 쓴다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權哲賢 議員** 몇 년도까지?

○**國防部長官 曹永吉** 201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權哲賢 議員** 2010년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아무 필요 없는 자주국방이 됩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주한미군과 자주국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權哲賢 議員** 왜 관련이 없습니까? 자주국방은 미군이 철수한다는 계획 속에 무기의 신도입 같은 것이 생각나는 것이지……

○**國防部長官 曹永吉**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지금 현재 자위적인 방위 역량을 갖추

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자주국방과는 직접적으로, 미군의 철수와 연관시키는 것은……

○**權哲賢 議員** 어떻게 국방부장관이 그것이 관계없다고 그러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국방부에서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자위적인 방위 역량을 기초로 해서 상호보완적인 한미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방침입니다.

○**權哲賢 議員** 참 한심스럽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몇 달 전에 재벌 기업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운전하고 순조로운 한반도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국제자본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가는 돈을 벌어서 국가에 보답하는 이른바 사업보국의 원칙 아래 대북사업 역시 수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특히 자본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투자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이 교훈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순서가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權哲賢 議員**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수익성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에는 대북 투자가 현실적으로 한결음도 나갈 수가 없지요. 우선 북한의 개방·개혁에 대한 인식이 생기도록 먼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수익 이전에 선투자 개념으로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사업가가 사업적 수익이 나지 않아도 투자를 해야 됩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사업가 중 큰 사업가들은 바로 눈앞의 이익을 보지 않고 중장기적인 큰 수익성을 생각하고 먼저 선투자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權哲賢 議員**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같은 기본 틀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도 다시 말하면 어떤 인프라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도 계속 개성공단 같은 것 만들고 투자를 계속해야 됩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지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민간 차원의 위탁가공 이런 것을 통해서 서서히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또는 자본주의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국제사회와 거래하는 관행에 대해서 조금씩 학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자본주의로 되리라고 봅니다.

○**權哲賢 議員**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저는 믿고 있습니다.

○**權哲賢 議員** 북한의 선군정치와 벼랑 끝 전술이 변하고 있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것은 마지막에 버릴 것입니다. 선군정치는 마지막에 버릴 수밖에 없는……

○**權哲賢 議員** 선군정치와 벼랑 끝 전술, 핵 전술이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도 과거에 쓰던 것에 비해서 요즘에 쓰고 있는 북한의 위협전략은 방법이나 범위가 크게 변했습니다.

○**權哲賢 議員**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것 조성을 하면서도 우리가 위기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 컨소시엄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만 일방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같이 해야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統一部長官 丁世鉉** 개성공단개발계획은 2000만 평 개발입니다. 1단계로 100만 평을 개발하고 2단계, 3단계까지 가면 2000만 평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1단계 100만 평 개발하는 데는 우리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두 업체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외국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을 구축해 놓고 2, 3단계에서는 국제 컨소시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국제 컨소시엄을 하기 위해서는 핵 전술 같은 것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것은 북한이 그런 데 대해서 인식을 점점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權哲賢 議員** 국제자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핵 전술이나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해야 국제자본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그것은 꼭 그렇게 선포기

후투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연결이 돼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權哲賢 議員** 핵 위기가 상존하고 선군정치 하는 북한에 국제 사업가들이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지금 우리 기업들만 북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의 기업도 들어가 있고……

○**權哲賢 議員** 개성공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국제 컨소시엄을 하자는 것입니다. 안 됩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국제 컨소시엄은 100만 평은 일단 우리 중소기업들이 들어가도 모자랍니다. 따라서 100만 평 이후에 2000만 평까지 완성이 되는 과정에서는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權哲賢 議員** 외국의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자꾸 순서를 거꾸로 바꿔서 말씀하시는데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도 외국의 기업을 끌어들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완전히 변한 다음에 북한에 외국의 기업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순서를 잡으시니까 얘기가 진전이 안 되는데 그것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權哲賢 議員** 지난 정권 때도 얼마나 퍼부었습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투자가 먼저라고 자꾸 주장하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퍼부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 정도의 투자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안보 불안감을 감소시켜 가면서 살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제2의 국방비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權哲賢 議員**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탈북자 수용소 건립에 대해서 미국 의회도 결의를 하고 세계가 움직입니다마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미국의 브라운백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탈북자 수용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법안으로 내놓고 있고 등등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히 몽고 같은 데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회의원들이 추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진

실이고 그것이 성사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UNHCR의 활동을 중국 정부가 인정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고, 그런 대중 요구가 결국 하나의 추동력이 되어서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을 빨리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데 대해서 중국이 일정한 정도 협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국민의 인권을 완전히 유린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인 이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權哲賢 議員** 탈북자 수용소 건립에 참여하실 것입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탈북자 수용소 건립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허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용하지 않는 데 어떻게 밀고 들어가서 집을 짓겠습니까?

○**權哲賢 議員** 중국도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성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네 나라에 제3국의 수용소를 만들겠습니까?

○**權哲賢 議員** 지금 중국도 탈북자 수용소를 건립해서 오히려 거기에 받아 놓고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權哲賢 議員** 좀 알아보십시오.

그다음에 북한 인권문제, 앞으로 북한과의 여러 가지 교섭을 하면서 인권문제 제시하시겠습니까, 언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이것도 선군정치나 여러 가지 대남 군사전략과 관련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일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먼저 북한 스스로 개방·개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의 경제 현실이 좋아지면 내부적으로도 인권문제에 대한 식견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 한 사람도 인권문제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당국에만

그 문제를 촉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순서를 먼저 잘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북한 국민들을 먼저 가르치시겠습니까?

○統一部長官 丁世鉉 북한 국민들은 점점 남한과의 교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왕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지금 깨우쳐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형편이 좋아져야 비로소 정치적 자유에 대한 개념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議員 생각의 앞뒤가 저와 너무 다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에게 남북한 민간교류의 문제점, 국군포로 및 납북자 대책 그리고 6자 회담에 임하는 원칙, 해외 체류 국민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우리 여야의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를 살리는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희망성쇠의 기로에서 우리는 제2의 아르헨티나로 전락할 수는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작년 월드컵대회 때 보여 준 국민적인 자신감과 국운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신임이 아니라 리더십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충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사퇴 요구를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닉슨이나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호소합니다.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행정부와 국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구국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혜량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富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源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 의원, 국회법을 보고 직원들이 설명을 충분히 드렸을 텐데요?

○朴源弘 議員 고친 원고가 이 컴퓨터에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副議長 趙富英 아니, 국회법 제148조를 보면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사용한다면, 앞으로 시대상황에 맞게 법을 고치면 그때는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현재로는 완전히 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朴源弘 議員 너무 전근대적이고요, 국회를 무시하는 넥타이 안 매고 온 국회의원한테나 주의를 주시고, 의장님 바로 옆에 컴퓨터가 5년 전 것이지만 5대나 있고 속기사도 컴퓨터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이번 한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게 주어진 15분 안에 의사진행발언 약 2분간을 먼저 포함하겠습니다.

○副議長 趙富英 그러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朴源弘 議員 이렇게 하면 정말 국민한테 보수 꼴통 국회가 됩니다. 2000년 첫 번째 회의 때도 제가 분명히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원고를 제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정의화 의원 단상에서 - 원고 있지요. 그냥 그것으로 하세요.)

원고하고 많이 틀리지요.

○副議長 趙富英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지켜야지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빼 가지고 오셔서 하세요.

○朴源弘 議員 악법도 법이라고 제가 법을 지키기로 하는데요, 넥타이 안 매고 온 국회의원만은 꼭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다섯 대의 낡은 컴퓨터와 속기사 컴퓨터는 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지요.

○副議長 趙富英 다시 시간 조정하겠습니다.

○朴源弘 議員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게 주어진 15분 안에 의사진행발언 약 2분간을 먼저 포함하겠습니다.

첫째, 정책여당 정신적 여당이라는 통합신당 의원들과 일부 의원님들 앞에 놓인 명패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한자는 중국 글자이고 한글만 우리 글자라고 오해하신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15대 때 김한길 의원처럼 ‘한길’이라는 한글 이

름을 가졌다면 몰라도 대대로 내려온 성과 부모님이 지어 주신 이름을 한글로만 표기하면 성과 함께 이름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유 씨만 해도 네 가지나 됩니다. 유재건(柳在乾) 의원과 俞鎭午 총장은 성이 다릅니다. 전 씨도 밭 전(田) 씨와 온전 전(全) 씨는 다른 성씨 아닙니까? 강 씨도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발음이 긴 趙舜衡 의원의 趙 씨와 발음이 짧은 曹雄奎 의원의 曹 씨는 다른 성입니다. 한글로만 성명을 쓰면 돌림자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겠다면서 한자문화권에서 한자를 안 쓰겠다는 발상은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한민족 문화의 양 날개는 한글과 한자입니다. 로마자가 서양문화권의 글자인 것처럼 1500년 이상을 써 온 한자는 한자문화권의 공통글자입니다.

본 의원이 내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자교육진흥법안 제출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이제 노트북을 쓸 수 있게 되었으나 본회의장에서는 아직도 못 쓰게 합니다.

여야 간 몸싸움할 때 흥기로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는데 이제 정보통신 강국이 된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도 핀란드처럼 각 의원님들 앞에 노트북을 놓고 KT의 네스팟 같은 무선통신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1월 첫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노트북을 단상에 가지고 나와서 정보통신 입국을 강조하며 본회의장 컴퓨터 사용을 요청하는 연설을 하고, 존경하는 金文洙 의원은 의석에서 노트북을 펴 놓았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마이동풍, 우이독경입니다. 국민의 대표들인 우리가 네티즌과 호흡을 함께하고 혹시라도 컴퓨터와 친하지 않은 의원님들도 컴퓨터를 쓰게 되시면 본회의장에 자리를 더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의장석과 좌우에 5년도 넘은 낡은 노트북이 여러 대 있는데 이것도 바꾸시고요, 형평의원칙에 맞도록 의석에도 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발언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정치현안에 시달려서 국가 백년대계를 잘못 보는 것 같은 우리 국회에 대해 우국충정의 뜻으로 말씀드린 것

이오니 깊은 혜량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출신 한나라당 朴源弘 의원입니다.

어느 세월이 태평성대였겠습니까만 지금이야말로 난세 중의 난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복, 국가의 이익과 백성의 행복을 만들어 주고 국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으니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정치는 참으로 왜소해졌고 경제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기업들은 나라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대통령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국민생활에 이렇게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 적도 드물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잘못 뽑았습니다.

盧武鉉 대통령 집권 8개월 동안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항상 ‘재검토’였습니다. 재검토 정권입니다. 이제는 재신임까지 받겠다고 하더니 이것도 재검토한다는 식입니다. 나라의 안위가, 안보가 큰 걱정입니다. 안정된 대통령을 가지지 못해서, 신뢰성 떨어진 대통령 때문에 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재신임은 비리와 실정, 무능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재신임이 된다 하더라도 국정 혼란은 바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신임투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벌써 탄핵 주장이 나옵니다. 최측근들의 비리가 연달아 터져 나와 지난 10일 대통령의 말대로 신뢰성과 도덕성이 이미 훼손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최측근들의 비리도 문제지만 대통령 자신이 능력이 없으면 더 늦기 전에 해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차한 이유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국일념입니다. 살신성인하십시오. 그래야 외국의 대한 신용도도 올라갈 것입니다. 경제도 회복될 것입니다.

총리께서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까 존경하는 柳興洙 선배 의원께서도 한번 물어보셨지만 정말 총리께서 盧武鉉 대통령께 나라를 위해서 지금이 물러날 때라고 말씀해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오전과는 다른 답변을 기대합니다만.

○國務總理 高建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재신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확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朴源弘 議員 일각에서 책임총리제,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수행 능력으로는 이러한 제도도 제 기능을 못하고 국정 혼란만 초래할 것입니다. 외치의 경험이 없고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 대통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는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서 외교부 또 청와대 보좌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朴源弘 議員 대통령의 처신에 관해서, 특히 외교와 관계된 처신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한·칠레 FTA, 총리께서도 빨리 비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그렇습니다.

○朴源弘 議員 또 한일 FTA,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國務總理 高建 예,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朴源弘 議員 그렇습니다.

또 경색되었던 한미관계는 요즘에 많이 풀렸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빨리 완전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더 풀어야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관계는 복원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공고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源弘 議員 다음에는 우리의 안보를 뒤흔드는 정체성 혼란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총체적 혼돈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동서·남남 등 모든 방향의 세력들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복합적 중층적 위기입니다. 사상적·이념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고요, 당연했던 것이 부정되고, 부

정되던 것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념과 보편적 개념이 깨지는 대신에 이를 대체할 중심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변화의 과정이 아닌 혼란스러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총리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이런 일을 초래한 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물론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탈권위주의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해묵었던 사회갈등 구조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비쳐지기도 합니다.

선진사회는 이런 문제를 사회 내부에서 흡수해서 해결하는 사회적인 해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속하게 성장해 온 과정에서 그러한 사회적 해결 시스템을 마련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문제 해결 태도와 협상의 문화를 습득해서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조정과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결집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朴源弘 議員 본 의원은 지난 2001년 4월 10일 바로 이 자리에서 林東源 당시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북한 노동당 서열 23위,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가 바로 그 송두율인가?”를 처음으로 물어보았고 장관은 두 번씩이나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걱정하고 개선하려는 행동과 독일 의사 폴러첸 씨는 우리 정부가 푸대접을 하면서 분명한 실정법 위반자로서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 귀화한 송두율을 불러들여서 민주투사로 미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친북 편향성은 열린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우리가 보기에 그 정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요, 남남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고 민족공존은 남북합작과 동의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친북노선은 국민의 정부 이후 여러 해 동안 우리 사회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면서 꾸준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결국 남북관계가 대결과 대립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교류 관계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우리 사회의 성숙도로 볼 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源弘 議員 이상만 높고 역사적인 큰 정치인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국민이 지금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朴源弘 議員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겠지요. 또 통일한국도 이런 바탕 위에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4조에 규정했듯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바탕 위에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朴源弘 議員 정말로 통일의 과정에서도 이런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이런 방향 위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었는지는 정말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총리께 여쭙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AP통신이 미국 정부가 3분의 1 수준인 1만 2000명을 감축하고, 그 성격도 대북 억지 주둔군에서 원정 기동 타격군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피터 페이스 미국 합참부의장, 해병 출신이지요. 또 찰스 캠블 주한 미8군 사령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의 언급을 보든지 또 미국 조야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미 그 방침이 정해진 것 같은데 정부가 이런 보도를 부인했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朴源弘 議員 그런데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정부와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정부는 한미 간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통해서 용산기지의 이전, 미 2사단의 재배치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성

격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전체에 대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따른 전략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협의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源弘 議員 상당히 함축성 있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전략개념의 전환,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國務總理 高建 전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朴源弘 議員 정부가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걸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국민적 불안이나 파장을 감안해서 감추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일부러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한미군들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위해서 110억 불에 해당하는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력이 이렇게 첨단전력으로 증강하게 되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인력이 다소 감축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감축 협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源弘 議員 지금 답변 중에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신 것으로……

○國務總理 高建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110억 불이라는 전력증강사업이 무기체계 첨단화를 통해서 전력증강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인력의 감소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은 공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朴源弘 議員 들어가시고요, 국방부장관 뵙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빠질 경우에, 3분의 1이 감축될 때 지금 이대로라면 한반도에 엄청난 안보 공백이 생기겠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습니다. 대북 억제력에서 다소 약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朴源弘 議員 북한과의 관계에서 안보 균형도 깨질 수 있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것은 어느 정도 감축되느냐에 따라서……

○朴源弘 議員 3분의 1이 감축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논의도 안 해 보고 연구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富英 부의장, 金台植 부의장과 사회교대)

○**朴源弘 議員** 지금 연구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아닙니다.

○**朴源弘 議員** 미국의 해군, 공군으로 보완한다고 하지만 중심이 짧은 우리의 특성상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원 전력이 도착하기 전에 북한의 속전속결 전략과 기습기동대에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거기에 대비해서 현재 연합군이 작전개념을 세워서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朴源弘 議員** 지금 주한미군이 맡고 있던 여러 임무가 우리 군에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일부를 이전하기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朴源弘 議員** 그래서 남북 상호 감군 또 군비통제가 북쪽과 합의가 되든가 아니면 우리 군의 전력증강이 대단히 시급한 것 같은데 북한에 군비통제를 적극 제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 문제는 현재와 같은 남북 간의 정치적인 화해가 우리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된다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필연적으로 군사적인 군비감축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 단계에서 판단해 본다면 아직 그럴 수 있는 상호 간의 신뢰구축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源弘 議員** 그 단계는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아직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源弘 議員** 2년, 3년?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게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源弘 議員** 그러면 우리의 전력증강대책이라든지 또 소요예산 조달방안은 서 있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대략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대북한에 대한 자주적인 억제전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源弘 議員**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군이 전 세계적인 전략개념의 변화로 기동원정군으로 전환될 경우 동북아의 안보균형은 아까 장관 말씀대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은 사실 이겠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러나 지금 현재 주한미군을 기동원정군으로 전환시키겠다거나 이러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朴源弘 議員** 그러나 대체적인 방향은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미국이 지금 현재 해외 주둔 병력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키면서 기동화해 가지고 분쟁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개념은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源弘 議員**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취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지요—이미 전략지도까지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먼저 핵시설 같은 것을 폭격한 다음에 서해안으로 인천상륙작전 같은 것의 실행을 거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대비도 다 하고 계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아직 논의도 안 되고 있고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朴源弘 議員**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께서 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 차관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대러시아 차관 원리금 탕감 문제, 이걸 정부에서 6억 6000만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차관 원리금을 탕감해 주기로 했지요? 러시아로부터 돈을 안 받고 대신 국민세금으로 물어 주려는 것 같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무려 5600억 원인데 1991년 차관 제공 이후 역대 정부도 매년 한 번꼴로 러시아와 협상을 벌였지만 국민들 볼 면목이 없다 하면서 차마 합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盧武鉉 정부는 출범 2개월 만에 협상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합의를 한 것 같은데 협상 결과를 보면 러시아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 주었습니다.

선진국들의 채권자 모임인—우리는 거기 멤버가 아닙니다마는—파리클럽의 조건보다 더 불리합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외 채무를 탕감해 주면서 국회 동의나 관련 근거 법률도 없이 일방

적으로 합의해 놓고 이제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와 동시에 우리 수출입은행은 러시아에 또 8000만 달러의 전대차관을 공여키로 했습니다. 또 꺾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차관도 국가가 지금 보증하는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지금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대러 상품 수출 지원을 위한 것이기는 한데 전대차관을 공여키로 한 것은 정부가 지금 보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朴源弘 議員** 러시아 차관 원리금은 러시아에 대한 국익 극대화의 레버리지입니다. 대러시아 외교의 이니셔티브 확보 수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의 핵이라든지 북한 민주화라든지 북한의 대러시아 부채와의 상계라든지 북한 철도 개량 등 대북 관련 정책에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카드를 버렸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간 러시아에 대한 경험차관 문제가 미해결됨으로 인해서 한국과 러시아 간에 정치·외교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각종 경험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상환 차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서 한·러 외교관계도 정상화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대러시아 진출 그리고 상품 수출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연체이자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보다는 크다는 판단하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朴源弘 議員** 저는 협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의 재건과 민주화를 위해서 치안 유지군을 보내는 데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제때에 상당한 규모로 파병을 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왜 자꾸만 전투병, 전투병 하는지 모르겠어요. 치안 유지군이고 전투병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가 파병 결정을 환영합니다. 재건비용 부담도 늘렸습니다. 당연하고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런데 왜 정책 여당이라는 통합신당 의원들 가운데는 이것을 의원 직을 걸고 반대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낙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

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함평·영광 출신 민주당 이낙연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힘드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괜찮습니다.

○**이낙연 의원** 미국이 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한 것이 9월 초였습니다. 약 50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파병 찬반으로 갈라진 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50일 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회를 포함해서 장관급 회의만도 네 차례나 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랬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이낙연 의원** 그런데 17일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가볍게 논의해 왔다. 본격적으로는 논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총리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고 대통령은 가볍게 논의했다고 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 가볍게 논의했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는 가부를 결정하는 무거운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 파병에 관련된 제반 요소를 면밀히 검토는 했지만 그것이 파병 여부 가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부를 결정해야 할 단계가 왔다는 뜻의 문맥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할 만한 표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 진의가 어디에 있건 간에 충분한 논의와 가벼운 논의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이 참여정부입니까?

말하자면 50일 동안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총리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 50일 동안 대통령의 참모들이 무슨 말씀을 해 왔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청와대 정무수석, “파병을 하지 않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9월 29일 경제부총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파병할 필요가 있다” 9월 30일 주미대사, “조건을 걸지 말고 파병하는 게 낫다” 10월 8일 정무수석, “파병 문제와 관련해 NSC와 국방부, 외교부의 시각이 편향되어 있다”……

그다음, 파병 결정 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9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너무 늦어져서는 곤란하다” 10월 1일 통일부장관, “결정은 빨리 해야 한다” 그런데 10월 13일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신중히 결정하겠다.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아무 말이나 해서 국론을 모으기는커녕 국론분열을 더욱 가중시킨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정부는 모럴해저드(도덕의 해이) 못지않게 오럴해저드(구강해이, 입의 해이)에 빠져 있습니다. 입의 해이가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그것이 도덕의 해이와 겹쳐져서 급기야 대통령 재신임 국면까지 초래한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국론분열을 방치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조장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입단속을 위한 특별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미국의 국무성과 국방성 그리고 청와대 안보보좌관이 서로 색깔이 다른,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듯이 우리도 최종적인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각 부가 자기 부처에서 보는 시각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진지한 협의의 자세가 아니라 혼선의 자세로 보이는 것이 잘못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이낙연 의원 좋습니다.

NSC하고 국방부, 외교부는 파병 찬성 쪽이었나요?

○國務總理 高建 국가안전보장회의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때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그 NSC 내에서 어느 부처가 어떤 의견이었고 하는 것은 저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 정무수석은 파병에 반대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 말씀이 “NSC 국방부 외교부는 시각이 편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파병 결정은 편향된 결정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편향된 사람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정무수석은 NSC 위원이 아니니까 저는 무슨 논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총리께서는 “18일 이전에는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요?

○國務總理 高建 예.

○이낙연 의원 18일 오전에 NSC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17일 밤 모든 방송이 파병 결정을 보도합니다. 18일 아침, 모든 신문이 파병 결정을 보도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18일 오전 아침 일찍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낙연 의원 그 회의가 열리기 전 조간신문에 일제히 파병 결정이 보도됐고, 그 전날 방송이 모두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다만 그때 18일 회의에는 회의 서류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협의회의를 통해서 서로 파병의 원칙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가 그 전날 작성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낙연 의원 그러면 18일 전까지 가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굳이 그렇게 따지시면 상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18일에 결정하는데 언론에서 그 전 가관부터 보도를 합니다.

○이낙연 의원 18일 NSC는 요식절차였지요?

○國務總理 高建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세 차례에 걸친 협의회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 18일 NSC가 가부를 뒤집을 수 있는 회의였나요?

○國務總理 高建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뒤집을 수도 있는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 총리님, 제가 아는 총리님은 이런 분 아니셨어요.

○國務總理 高建 그러나 먼젓번 세 차례의 회의 과정을 통하면서 공감대가, 최소한도 파병의 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침 8시에 하는 회의의 결의 내용이 하루 전에, 조간 가관에 나왔다고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이낙연 의원 그 전날 보도는 또 부인했었거든요?

○國務總理 高建 본회의를 하기 전에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웃음)?

(웃음소리)

○이낙연 의원 예, 인정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들을 대통령께서 만나시면서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 이전에 이미 4당 대표들한테 파병의 원칙이 통보되었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그날 오후 늦게 됐습니다.

○이낙연 의원 그러면 시민단체 대표들은 속은 셈이잖아요?

○國務總理 高建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어느 정도 느낌으로서 공감을, 대체적으로는 인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의원 그랬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이미 다 통보가 된 것이지요? 밀약이 됐었던 것이지요?

○國務總理 高建 그 전에 통보는 하지 않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 협의를 했다면 우리 측에서도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협의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말하자면 그 단계적인 결정에 대해서 미국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 10월 2일 미국을 방문한 국방부 정책실장이 “우리 군은 내년 초에 북부 모술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월 14일 나중일 보좌관이 미국에 가 있는 그때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보내 준 매우 좋은 지지를 앞으로도 계속 보내 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것 파병 기정화 발언이거든요. 이래도 밀약이 없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밀약이라기보다는 서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의원 미국은 우리가 파병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정부의 발표 이전에 이미 알았던 것이지요?

○國務總理 高建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낙연 의원 그것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온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통보는 그 당시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낙연 의원 파병과 북핵이 연계됐느냐 여부

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계된 것은 아니다. 단지 한미관계가 강화되면 북핵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다.”

맞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렇습니다.

○이낙연 의원 그러면 9월 24일 盧武鉉 대통령, “한반도의 안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국외로 파병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10월 1일 국군의 날,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신할 수 있는 보다 안정된 대화 국면의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10월 3일,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부대를 편성하고 훈련하고 장비를 배에 태워 보내는 등 일이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6자 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열렸다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에서 플루토늄을 어떻게 한다, 미사일을 어떻게 한다고 강공으로 나왔을 때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격한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연계발언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발언은 무슨 뜻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연계는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파병 문제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두 가지를 조건부로 연계시킨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 그런데 9월 30일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 “이 두 현안, 안보와 파병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 아까 연관 있다 그러셨는데 ‘별개’하고 ‘연계’하고 어떻게 됩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러니까 조건부 연계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낙연 의원 조건은 아니지만 연관은 있다?

○國務總理 高建 관련이 있다……

○이낙연 의원 ‘별개’라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결정은 연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낙연 의원 관련은 있는데?

○國務總理 高建 예, 관련 있다는 것은 북핵문제나 파병 문제나 모두 다 공통분모는 한미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 그렇다면, 연계를 하지 않았다면,

보도에 따르면 “盧 대통령께서 연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미국에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계가 아니라면 왜 연계가 아니라고 친서를 보내야 됩니까?

○**國務總理 高建** 일부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낙연 의원** 왜 오해가 있었을까요?

○**國務總理 高建** 일부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대통령께서 언거푸 비슷한 말씀을 하시니까 미국 쪽에서 우려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울포워츠 부장관을 포함해서…… 뭔가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연계 아니라는 해명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희들은 고려 요소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건부 연계로 해석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해명을 했고 그런 친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친서가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오늘 나종일 보좌관은 방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서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북핵문제와 파병 문제는 별개사안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점을 미측에 통보한 일이 있다.” 이랬습니다.

별개라면 별개인 것이지 왜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기에 이렇게 여러 차례 설명했어야 됐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잘못 오해를 가져오는 신문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낙연 의원** 오해를 유발할 만한 뭐가 있었다고 인정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아니요, 신문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 신문 탓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이낙연 의원** 연계가 아니라면 앞으로 북핵문제는 어떻게 풀어 갈 작정이십니까? 지난봄에 1차 파병을 할 때, 그때도 안보상의 이익을 정부는 설명했습니다만, 1차 파병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안보상의 이익을 얻었습니까? 1차 파병 이후에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2차 파병으로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1차 이라크 파병이나 2차 파병이나 모두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관계가 공고화되면 결국 한미공조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산술적으로, ‘일대일 조건부로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차 파병 당시, 그때부터 경제적 실익에 대한 기대가 국내에서 고조됐습니다. 오죽 했으면 제2 중동특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까지 발주된 27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이라크 전후 복구공사 가운데 국내 업체는 단 1달러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에도 우리는 경제적 이득을 별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파병하면 어떤 경제적 이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역시 앞으로의 장기적인 재건 사업에 대한 참여 또 한 가지는 장기적인,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은 항상 한반도의 안보·경제 환경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소 말하자면 안보·경제 환경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개선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따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을 우리가 이러한 야트막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 했다고 내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기대이익일 뿐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전후 이라크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로서 파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 총리께서는 조건은 아니었지만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든가 전후 복구사업에의 참여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이낙연 의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17일 “파병을 한다고 해서 석유자원이나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뜻입니까? 총리 말씀하고……

○**國務總理 高建** 거의 뜻은 통한다고 생각합니

다. 직접적이고 교환적인 그런 이익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이낙연 의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가벼운 논의하고 충분한 논의가 같은 것”이라고 하시더니 “이익이 크지 않다”는 말하고 “이익을 기대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것이 어떻게…… 적어도 대통령 말씀과 총리 말씀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총리는 그래도 조금 적게 생각하니까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크게 보시니까 적은 이익 아니겠습니까? (웃음)

○**이낙연 의원** 이번에 정부는 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재건 분담금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파병비용도 1만 명 사단을 보낼 경우 약 7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국방부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 있는 서희부대, 제마부대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을 보낸다고 할 경우 그리고 그 1만 명이 1년 이내만 주둔한다고 했을 경우에 1조 55억 원의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혹시 金大中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대북 지원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정부 차원에서 3425억 원,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2565억 원으로 합쳐서 5990억입니다.

그런데 이라크에 이제까지 간 것 빼고, 지금부터 새로 부담해야 할 것이 1조 55억 원이다, 이 배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정부가 3425억 원을 주었는데 5년 내내 퍼 주기라는 시비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이 퍼 주기라면 이라크 비용 부담은 ‘왕’ 퍼 주기입니다, 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이라크 진후 복구 지원을 위한 파병에 따른 소요경비를 1조 원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재로서는 부대의 규모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좌우간에 파병경비를 포함해서 우리의 재건 지원금은 4년 동안 2억 6000만 불입니다마는, 일본은 4년 동안 50억 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재건 지원금에 대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 자꾸 일본하고 비교하시는데 독일 불란서 러시아는 군대도 안 보내고 돈도 안 내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병력이 500명 가는 것

이지요? 몸으로 때우지 않고 돈으로 때우려고 하기 때문에 50억 불입니다. 그것도 15억 불이라는 기준이 좀 다릅시다마는. 우리는 병력도 1만 명을 보내고 돈도 그만큼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도 때우고 돈으로도 때우고,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다소 부담을 느끼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추어서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미관계하고 미·불관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의원**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이라크에 1조 원 이상을 퍼부어 줘도 괜찮은 상황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원까지 된다는 계산은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의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5000명을 보낸다고 할 때도 6555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마 1만 명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현재로서는 부대 규모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대 규모와 관련해서는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국회와 상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낙연 의원** 총리께서는, 모술이 유력한 주둔 후보지 가운데 하나이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이낙연 의원** 그렇다면 미국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모술 이외의 지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이론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 현실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론상으로요?

○**國務總理 高建** 현실적으로는 지도를 놓고 보면 상당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 어렵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남부 지방이 좀 안전하고 북부가 좀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모두 남부로 가고 일본도 남부로 갑니다. 아무런 일도 없으면 다행이겠습시다마는, 우리만 북부로 간다 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게 느껴지고 이대로 해서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지금 주둔 지역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모술 지역은 그동안 서희부대, 제마부대, 현지 조사단 또는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 등의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치안 상황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지 조사단의 추가 파견을 통해서 모술을 비롯해서 이라크 현지의 최근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파악한 후에 지역을 협의·결정할 것입니다.

○**이낙연 의원** 어젯밤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못 봤습니다.

○**이낙연 의원** MBC 이진숙 기자가 한국 언론으로서 처음으로 무자해딘 특별 인터뷰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군이 온다면 우리는 한국군을 죽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선 첫째는 1차 파병한 서희부대, 제마부대가 상당히 환영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가는 것이 교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라크의 전후 복구를 위해서,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재건 지원 부대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저항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주변 아랍 국가들도 이라크의 정국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의원** 우정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 파병 병력에 인명 손상이 생긴다면 그때의 여론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각오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國務總理 高建** 정부로서는 우리 젊은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한국군도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빈 라덴도 파병국에 보복 테러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이 테러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물론 파병 후에는 대테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이라크의 과도통치위원회와 또 아랍권 국가들과의 이해의 폭을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넓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 절대 안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남북한 사이에 대화와 교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참여정부의 독창적인 대북정책이나 구상이나 사업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북핵문제라고 하는 원초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철학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 평하자면 국민의 정부가 펴 온 햇볕정책의 열매를 따먹고 있을 뿐 참여정부 자신들의 농사를 스스로 짓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개성공단 착공식이 6월 30일에 열렸습니다. 4개월 가까이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공사도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개성공단 건설은 부지 조성 준비와 함께 우선 우리 기업이 거기에 가서 안정적으로 공장을 경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위 협약은 되었는데 하위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위 규정을 전부 병행해서 제정하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다소 느리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계획된 일정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의원**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을 거의 마지막 희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통일부의 허가가 나는 대로 5개 업체 정도 입주할 수 있는 시범공단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가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총리가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소기업 업계가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 토공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하위 규정까지 포함해서 측량, 토질조사, 사무실 설치 협

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기본설계만 마무리되면 내년 초에 착공이 이루어지고 상반기 중에 시범단지의 가동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그러면 내년 초에 착공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공사 착공입니다.

○이낙연 의원 6월 30일에 착공식을 했는데 내년 초 착공이면……

○國務總理 高建 큰 의미의 착공이고 이것은 부지 조성공사의 착공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지난 8월 말이면 盧武鉉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6개월이 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지지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지지도는 30~40% 사이였습니다. 분야별 점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나 한미관계가 어떠냐 했더니 ‘잘 한다’ 하는 국민이 10%선이었습니다.

지지도보다 매우 낮은 평점인데 왜 이렇게 나쁜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총리께서는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사실은 7개월 전에 참여정부가 출발할 때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불리한 최악의 국정환경 조건하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미관계가 역사상 가장 불편한 관계로 치달았고 한반도의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또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SK글로벌 그리고 카드채 문제로 금융시장이 강타를 당했습니다. 또 사스와 이라크 파병이 겹쳤습니다. 거기에다가 탈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서니까 해묵었던 사회적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최악의 조건하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동안에 한미관계 복원시켰습니다.

북핵문제—6자회담으로 평화적 해결의 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사스—사스는 WHO에서 사스방역 모범국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된 여러 가지 집단갈등을 정권 출범 초기에 미흡하게 다룬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5월 이후에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원칙대로 다루어서 노사관계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경제입니다. 강타를 당한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막고 안정을 시켰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을 겨우 안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카드채로 인한 소비 위축, 내수 위축으로 인한 경제 불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남북관계하고 한미관계를 여쭙으더니 경제 살리기 말씀을 하시네요. 전 정부 탓을 하시는 것이 조금 뜻밖이고 특히나 한미관계가 나빠진 것마저도 전 정부 탓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현 정부도 곧 전 정부가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台植 이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평·영광에서 오신 분들이 박수치고 싶은 모양인데 국회에서는 박수를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박수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尹汝雋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雋 議員 한나라당의 尹汝雋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안보 문제로 국론이 갈라지고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보기에 이 정부가 국가안보의 우선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가 명확하게 어떻게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에 나와 있듯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 이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尹汝雋 議員 한반도의 평화 유지 즉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전쟁 방지가 국가안보의 최고·최선의 목표겠지요. 그렇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尹汝雋 議員 그러면 그 국가안보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선 첫째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고, 또 자주적인 방위 역량도 확충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尹汝雋 議員 한반도의 전쟁 방지는 지금까지 한미 동맹에 바탕을 둔 연합전력으로 달성해 왔지요. 그렇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尹汝雋 議員 지난 50년간도 그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우리 국가안보에 아주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國務總理 高建 그렇습니다.

○尹汝雋 議員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지금 총리하고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렇습니다.

○尹汝雋 議員 그러면 盧武鉉 대통령 취임 후에 한미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지요? 아까 총리께서는 회복됐다고……

○國務總理 高建 긴 과정으로 보면 한미 관계가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尹汝雋 議員 지금은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내외적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르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國務總理 高建 그러면 7개월 전의 신문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때는 굉장히 악화됐었습니다.

○尹汝雋 議員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 아까 총리 말씀하신 대로, 한미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상, 내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그렇게 쉽게 동맹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통령의 언행이 이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둘째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셋째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 등 3개 분야와 10대 과제를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세 번째 분야인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이란 무슨 뜻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해서 자위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 즉 한미동맹과 자주적 국방 역량이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한미동맹 관계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지역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尹汝雋 議員 세 번째 분야에 3개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 1. 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2.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國務總理 高建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반자적인 관계의 강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尹汝雋 議員 그러면 1항인 자주적 방위 역량의 조기 확충과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것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尹汝雋 議員 그렇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상충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尹汝雋 議員 그러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주적 방위 역량의 조기 확충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한미동맹 관계에 바탕을 둔 연합 억지력에 의한 현재의 우리 국방태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다 하는 그런 인식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방위 역량의 강화……

○尹汝雋 議員 그런데 어째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의 확립을 세 번째 과제로 들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얘기이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자주적 방위 역량의 조기 확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현재의 국방태세가 한미동맹 관계에 바탕을 둔 연합 억지력에 의한 것 아닙니까? 이 국방태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것이 이렇게 해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이지요.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런 뜻은 아닙니다.

○尹汝雋 議員 절대 아니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아닙니다.

○尹汝雋 議員 분명히 답변하세요.

○國務總理 高建 예, 아닙니다.

○尹汝雋 議員 그러면 盧 대통령이 지난 1일 제 5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앞으로 10년 안에는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 자신의 임기 중에 토대를 닦겠다, 그랬는데 이 말은 10년 내에 한반도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한미 연합 억지력에 의한 한반도 평화 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안보는 한미 연합 전쟁 억지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尹汝雋 議員 알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분야인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이라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해석에 오해를 낳을 소지가 많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NSC가 이런 책자를 만들었어요. 국정홍보처가 지난 8월에 발간한 책자입니다. 여기에 이 대목이 나와 있는데 설명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 번째 분야는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제시된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공개적으로 이런 논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國務總理 高建 알겠습니다.

○尹汝雋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육군 사병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IMF 사태 극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회 각 분야가 구조조정에 매달릴 때 우리 군은 어떤 구조조정을 기울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군도 물론 IMF 때에는 직접적으로는 예산 절감에 주안을 두고 노력을 했고, 그와 별도로 우리 군은 현재 군의 상부 구조의 축소라든지 불필요한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서 군을 정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

니다.

○尹汝雋 議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습니다.

○尹汝雋 議員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구조조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크게는, 우리 군 전체의 전력구조로 본다면 아직도 인력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분야를 우리가 기술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기술 집약적인 군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지금 현재 비대화되어 있는 우리의 상부 구조들, 행정조직들을 좀 줄여 가지고 전투 부대의 비중을 늘려 주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尹汝雋 議員 행정 능력을 줄여서 전투력으로 집어넣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제가 보기에 우리 육군이 56만 수준의 방대한 보병을 유지하고 있는 것, 또 이 병력을 지휘하는 불합리한 편제, 이것이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 부분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군이 지난 30년 동안 62조 원 정도의 전력증강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습니다.

○尹汝雋 議員 그래서 괄목할 만한 전비태세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지적했듯이 왜 아직도 56만 수준의 보병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國防部長官 曹永吉 지난 30여 년 동안에 약 62조의 전력증강 투자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큰 액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실제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예산적인 지원에서 좀 부족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상군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북한과 지금 현재 육속되어 있어서 전선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현재 100만에 달하는 지상군을 전선에 배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尹汝雋 議員 그것은 아주 모범답안이지요. 아직도 그런 모범답안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목격한 현대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C4ISR(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수집, 전장감시, 정찰능력) 이런 첨단체제하고, 첨단 정밀무기 앞에서 재래식으로 무장을 한 방대한 지상군이 얼마나 무력한가, 우리 똑똑히 목격했지요.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습니다.

○尹汝雋 議員 이것이 바꾸어 말하면 디지털 군사력과 아날로그 군사력의 차이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미군은 10년 전부터 군 개혁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밀리터리 트랜스포메이션(Military Transformation), 그렇지요? 그래서 군을 디지털화하고 경량화하고 기동화에 많이 주력했지요? 현역 사단도 많이 줄었지요. 그렇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습니다.

○尹汝雋 議員 지금 우리 주한 미 2사단도 굉장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는 지난 1954년 11월에 체결된 한미합의의사록이라고 아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尹汝雋 議員 아시지요? 이 합의의사록에 의해서 우리 육군 병력이 그때 정해진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20개 사단 60만 1000명, 1954년 11월에 체결된 것이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육군이 아니고 국군의 병력입니다.

○尹汝雋 議員 아니, 육군만 그래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육군은 52만 7800……

○尹汝雋 議員 아니, 그것은 58년에 수정이 되어 가지고 56만 5000이 되었고 당시에 李承晩 대통령이 북진 통일할까 봐, 미국이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국군에다 공격력은 안 주고 대신 병력을 많이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육군을 그렇게 해서 비대시킨 것이란 말이지요. 물론 전액 군원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당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뉴룩(New Look) 정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尹汝雋 議員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62조 원의 전력증강비를 썼는데 아직도 같은 수의 보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

을 납득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북한이 100만이 있고 70%가 원산~평양선 이남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대전에서의 특성을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첨단무기 앞에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더군다나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군사기밀이라고 하실 테니까 제가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C+60 이내에 어느 정도 규모의 미 지상군이 한반도에 전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엄청난 수가 오게 되어 있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습니다.

○尹汝雋 議員 대단한 규모의 미 해군과 공군력이 전개합니다. 그렇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尹汝雋 議員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62조 원의 전력증강 예산을 들여서 우리의 전비태세가 향상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디지털 전쟁이라는 현대전의 특성이라든지 유사시의 미군의 전개계획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56만 명의 보병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기술군을 지향하고 방금 지적하신 C4ISR를 확보한다는 것은 군의 영원한 숙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가의 능력과 병행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尹汝雋 議員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경제력 가지고 단시일 내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대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을 기술군으로, 전력증강을 첨단무기로 한다면 당연히 대규모의 보병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아직도 그런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尹汝雋 議員 그렇지 않지요. 제가 방금 현대전의 특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북한군이 70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래식으로 무장한 북한군이 연합 역지력의 첨단 무기 앞에 얼마나 무력하겠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尹汝雋 議員 소위 적의 위협분석(threat assess-

ment)를 하려면 저하고 장시간 토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 봐서 현재 이런 수준의 보병은 줄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약 10만(6개 사단)을 줄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절약되는지 아십니까? 연간 약 4700억이 절약됩니다. 이 돈을 전력증강에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예산을 많이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군이 이런 면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국방예산 중에 경상운영비가 약 67%입니다. 인건비가 약 42%예요. 전력투자비가 33%, 배가 넘는 경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과연 후진적 구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저희는 현재 북한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받으면서 전력증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전력증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尹汝雋 議員** 제가 언제 북한의 위협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제가 언제 북한의 위협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국방부 자료에 보니까 군의 디지털화를 말씀하시던데 그 디지털화와 육군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 보겠습니다.

미군은 플로리다주에 중부군사령부가 있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습니다.

○**尹汝雋 議員** 이라크가 약 50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다고 그러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尹汝雋 議員** 그런데 5000마일 이상 떨어져서 한 이라크전쟁을 플로리다에 있는 중부군사령부가 지휘·통제했지요? 물론 이라크 현지에 전방사령부가 있기는 했지만요. 또 우리 해군도 진해에 있는 함대사령부에서 KNTDS를 이용해서 서해교전을 지휘·통제했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습니다.

○**尹汝雋 議員** 또 공군은 오산에 있는 TACC, 전역공군작전본부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모든 공군작전을 지휘·통제하지요? 미군이나 우리 해군이나 공군, 이것이 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면 그래도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육군은 3군 중에서 가장 디지털화가 뒤떨어져 아직도 아날로그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에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런 면에서는 육군의 질적인 개선이 다른 군에 비해서 다소 좀 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尹汝雋 議員** 그렇지요?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

우선 한반도 남쪽의 이 좁은 국토를 지키는 데 왜 3개 군사령부와 11개 군단이 필요합니까? 편제에 관한 것입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것은 군사 전문적인 문제이고 또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尹汝雋 議員** 모든 것이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장시간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尹汝雋 議員** 몇 가지 요소로 짧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尹汝雋 議員** 이것도 우리 육군이 모범답안을 가지고 있어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尹汝雋 議員** 글썄, 그 필요성이 무엇이라는 것이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필요는 국가의 안보입니다.

○**尹汝雋 議員** 국가안보라는 것이, 누가 지금 국가안보를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것을 없애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尹汝雋 議員** 아니지요. 디지털화해서 군을 경량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군처럼 편제를 바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디지털화하는 것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尹汝雋 議員** 군사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 됩니까? 4개의 함수로 결정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사람·시설·편제, 4개 요소의 함수

가 군사력 아니에요. 맞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尹汝雋 議員**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요소 중에서 뒤에 나오는 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의 3개 요소를 지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현대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불합리한, 前시대적인 편제를 디지털 추세에 맞춰 가지고 빨리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이 구조조정을 하려면 정작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일부 조정을 개편하고 행정병을 전투병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구조조정입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군의 구조조정의 핵심과제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런 3개 군사령부와 11개 군단이라는 불합리한 육군편제가 왜 생겼는지 저도 알고 장관도 아시잖아요? 군이 말씀드리면 이것이 과거에 우리 군, 특히 육군을 정치적으로 관리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불합리한 제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을 그냥 둘 필요 없잖아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저는 반드시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尹汝雋 議員**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고쳐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남북한 군사력 격차를 얼마로 보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북한이 우리보다 재래식 전력, 양에 있어서는 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질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그것을 상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尹汝雋 議員** 지금 군에서는 대개 약 80여% 정도 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런데 그것을 수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별로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尹汝雋 議員** 그런데 우리가 전력평가를 할 때 주로 정태적인 방법을 쓰십니까, 동태적인 방법을 쓰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계량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분석기법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尹汝雋 議員** 국방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미래에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부’ 이것이 지난 8월에 나온 것이지요? 여기 보면 우선 양적인 비교가 나와 있어요. 병력 탱크 전투함 잠수함 전투기 등등이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탱크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북한은 3700대 우리는 2350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1300여대가 부족합니다. 엄청난 열세지요. 질적으로 보면 아니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것은 수치의 문제만은 아니고 운영과 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尹汝雋 議員** 북한이 가진 전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T-34, T-54, T-55, T-62 그렇지요? T-34는 2차대전 때 쓰던 전차고 나머지는 50년대나 60년대 전차 아닙니까? 북한군이 보유한 전차가 기동 중에 사격할 수 있나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 육군이 가지고 있는 탱크는 최근에 러시아에서 들여온 T-80 계열, T-90 계열 말고도 우리가 돈을 들여 개발한 K1 탱크는 아주 성능이 우수하지요? 기동 중에 사격이 가능하고 명중률도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가 전력을 비교할 때 우리가 탱크 1대, 북한도 탱크 1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尹汝雋 議員** 그런데 여기다 그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지요.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것은 아마 양적인 비교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尹汝雋 議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러나 저희는 질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尹汝雋 議員** 이렇게 양적으로 하는 것을 외국 군사 전문가들이 무엇이라고 그러는지 아시지요? ‘빈 카운팅’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콩알셈법 같은 것이지요. 나 콩알 하나, 너도 콩알 하나 하는 식으로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빈 카운팅이라고 그러는데……

○**國防部長官 曹永吉** 우리 군대가 그럴 정도로 지금 사고가 낙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尹汝雋 議員** 앞으로는 우리 국방부가 대국민 홍보용으로 이런 것을 만드실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야 오히려 설득력이 더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참고하겠습니다.

○**副議長 金台植** 尹汝雋 의원님 아주 해박한 논리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출 출신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망과 생존이 코드 맞는 몇몇 아마추어들의 손끝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외교 역량, 안보 역량이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혼선과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정부의 그 누구 할 것 없이 대통령의 입과 코드만 바라볼 뿐 소신도 없고 건설적인 비판도 없습니다. 이것이 盧武鉉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시스템’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정책 수행에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굳건히 하는 일임을 밝히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12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질문이 대부분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겹치는 질문은 생략하고 설사 겹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답변에 다소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존경하는 이낙연 의원께서 이미 질문을 하신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답변 내용에 의문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라크 파병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부 내에서 재정경제부 부총리나 외교통상부장관 그리고 국방부장관 등은 파병 찬성과 시급한 파병을 주장하는 반면에 청와대의 유인태 정무수석을 비롯한 몇몇 수석은 노골적으로 파병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정부와 청와대가 파병 찬성

과 반대를 제각각 앞장서서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국무성과 국방성 안보보좌관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듯이 우리도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일사불란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의 시각에서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미국에서 NYT에 나오면 그것은 별문제가 안 되고 우리는 항상 그것이 일사불란하지 못하고 국론분열을 선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처별로 의견을 개진하는 데도 어떤 룰을 정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 미국과 우리 사회의 어떤 건전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혼란 정도를 볼 때 과연 미국과 똑같이 지금 각자 제각각 말을 하는 것이 상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희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룰을 앞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권영세 의원** 10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이라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 하루 뒤인 10월 17일 盧 대통령께서는 이제까지 가볍게 논의해 왔지만 18일 NSC를 열어 본격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파병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 부분에서 ‘가볍게 논의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낙연 의원님께서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너무 가벼우신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그런 문제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중요한 국정현안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세워 놓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盧 대통령의 말씀은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정부

가 어떻게 대처할지 전혀 사전에 결정되지 못한 것처럼 들립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유엔 결의 등 중요한 요소들과 관련하여 파병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시나리오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정부는 10월 18일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세 차례의 장관급 회의를 했고, 4~5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다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에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형태로든 파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미 측과의 협의 그리고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서 파병부대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렇다면 유엔 결의가 통과된 경우에 그때는 바로 파병을 찬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부 논의가 이미 있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모임 이후에 공감대가 조성되었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 세 번째 모임이 언제 있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제가 10월 10일쯤으로 기억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10월 10일입니다.

○**권영세 의원** 그렇다면 10월 10일쯤에는 이미 정부가 유엔 결의가 통과되면 파병을 한다, 이런 내용이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國務總理 高建**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한 결과 이제는 결정을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추가파병의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권영세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요소별로 이런 요소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는 결국 없었다는 얘기네요?

○**國務總理 高建** 아니, 요소별로 있었지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권영세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엔 결의가 나왔을 때……

○**國務總理 高建** 유엔 결의도 많은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권영세 의원** 아까 많은 요소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엔 결의가 나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은 시나리오상 무슨 내용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시나리오라는 것이 1안, 2안, 3안 해서 이렇게 될 경우……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고 요소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요소 검토에 대한 저희의 판단 내용입니다.

○**권영세 의원** 그렇다면 총리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별로 시나리오가 사실상 정교하게 짜여지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교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시나리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대안이라는 것은 파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권영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盧 대통령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10월 17일 파병 관련 발언 시에 다음날인 18일 NSC 등을 열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일 오후 즉 17일 오후에 이미 각 당 대표에게 이라크 파병 결정을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역시 17일盧 대통령으로부터 파병 결정을 사전에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로부터 회의 준비 서류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준비 서류에 파병원칙이 정해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렇다면 이미 파병원칙이 정해진 뒤에 NSC가……

○**國務總理 高建** 회의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일 NSC를 여는데 회의 서류를 그 전날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영세 의원** 예.

○**國務總理 高建** 그러면 그 서류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공감대에 근

거해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 의결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 논의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서류는…… 국회 본회의 의결되기 전에 안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권영세 의원** 그러면 盧武鉉 대통령께서 “18일 NSC를 열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총리께서 말씀하신 거로는……

○**國務總理 高建** 그래도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를 했습니다.

○**권영세 의원** 지금 총리께서는 상당한 논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도에 의하면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가 NSC는 1시간 정도 계속됐고 그 회의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기본원칙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절차적인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안이 보완됐습니다.

○**권영세 의원** 절차나 보완적인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고 파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이 盧武鉉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盧武鉉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國務總理 高建** 그 정도의……

○**권영세 의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병방침은 다 정해졌고 부수적인 부분이나 기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권영세 의원** 그럼 됩니까?

○**國務總理 高建** 어디까지나 결정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듯이 충분히 심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듯이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권영세 의원** 지금 국회의 예를 드시는데 국회에서 의결할 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하지 본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한다는 식의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 점은 조금 다릅니다. NSC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회에

서도 활발한 논의를 합니다.

○**권영세 의원** 총리께 파병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 지난 13일 시정연설을 할 당시에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17일 전격적으로 파병 결정을 했습니다. 이 4일 동안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라면 유엔의 결정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4일 내 도대체 기타 다른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존의 입장이 번복되고 파병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정부로서는 그동안 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검토했고 또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유엔 안보리 결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원칙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는…… 조금 아까 총리께서 유엔 안보리 결정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요소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권영세 의원** 예?

○**國務總理 高建**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요소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권영세 의원**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지 ‘결정적인 요소’라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요소 하나의 변동 때문에 갑자기 4일 내에 기존의 입장이 완전히 번복되어서 파병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별로 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하는 그 ‘신중’이라는 단어가 겨우 나홀 차이냐, 이렇게 따진다면 사실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권영세 의원** 더군다나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17일에 그동안 가볍게 토론되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아까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 “‘가볍게’라는 부분은 아무런 결정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논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찌면 17일 하루에 결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차

례의 회의를 통해서…… 그 경과를 제가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과 코드가 같다는 NSC 사무차장 이종석 씨가 각 기관으로부터 올라오는 보고서를 중간에서 수정해서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 특별한 상의도 없이 보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가 안보를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리께서는 NSC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 때 제 때 제공받고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저도 NSC로부터 각종 안보 관련 정보자료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NSC 상임위원회에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의 실무 책임자 얘기를 하셨는데 NSC 상임위원회나 NSC 본 위원회,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보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외교, 국방 등 각 부처가 독자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날 가져와서 보고하고 설명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NSC 사무처 실무 책임자들이 각 부처의 보고를 가감하거나…… 그 회의에 각 부처의 서류를 가져와서 각 부처 장관이 직접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NSC 사무처 실무자들이 과정상 그 서류를 가감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NSC 사무처에서도 종합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감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토픽, 이슈 하나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부처가 같이 보고를 했지 NSC 사무처가 종합해서 보고하고 끝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가 정보사항을 수정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지금 행정부처 내에서도 NSC의 독주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통합신당에서도 청와대의 전반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안보는 코드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보전략에 있어서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

부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의 균형 잡힌 의견이 제대로 수렴돼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안보보좌회의의 사무처 구성을 보면 사무차장 밑에 전략기획실장인 서주석 실장은 盧武鉉 사단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고, 정책조정실장은 통일부, 정보관리센터장은 국정원, 위기관리센터장은 국방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있지만 실제 사무차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통상부장관이 구성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지만 실제 안건이 기획·조정되고 정보가 축적·배분되는 실무진 차원에서는 외교통상부의 외교 역량이 체계적으로 투여될 수 있는 루트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혼선과 이로 인한 한미동맹 관계의 훼손에는 이런 NSC 사무처의 코드 중심 인적 구성과 전략적인 외교 마인드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외교안보정책의 입안·추진 과정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축적된 역량이 인풋(input)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는 그러한 점이 감안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권영세 의원 됐습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계시면 차관님이 대신 나와 주십시오.

이라크 파병이 최종 결정되기는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미정책 조율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일관성 없는 정책이 한미동맹 관계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파병과 관련해서 우리 당국자들이 방미하고 나면 한미관계가 더욱더 악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지난 9월 25일 尹 장관께서는 유엔총회에 참석한 계기에 파월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때 尹 장관은 이라크 파병 문제와 북핵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尹 장관의 이런 입장은 10월 1일 제5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행해진 대통령 연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徐柱錫 NSC 전략기획실장이 방미해서 켈리를 만났을 때도 연계를 주장했다가 켈리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연계방침에 대해서 9월 28일 롤리스 국방부 차관보는 우리 尹 장관에게 “한국이 그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파병을 하지 말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정부는 10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나중일 국가안보보좌관에게 盧武鉉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서둘러 미국을 방문하게 했고, 그 친서의 요지는 ‘이라크 파병 문제는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6자회담과 파병 문제는 연계하지 않겠다’라는 것 등이었다고 합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미숙함과 협상력 부재가 결국 대통령의 친서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교통상부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롤리스 차관보가 尹永寬 외교부장관한테 두 가지 문제를 연계시킨다면 이라크에 파병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식의 협상과 그런 반응을 미국 측에 보인 적은 없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 점과 관련해서 우선 친서 문제가 있기는 있었지요?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친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나중일 국가안보보좌관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으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때까지 정부가 이라크 파병 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연계시켜서 미국과 협의한 적은 없다, 그리고 미국 측에 이러한 것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차관님께서도 그 당시에 나중일 보좌관과 함께 방미하셨지요?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李秀赫 차관보가 같이 갔습니다.

○**권영세 의원** 우선 연계론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총리께서도 그렇고 모두 부인을 하시지만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연계라고 읽힐 만한 말을 하셨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오해가 아니라 제목이 어떻더라도 그 연계론이 사실상 연계론 아닙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처음 그게 알려지기는 NYT에서 尹永寬 외교통상부장관이 파월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연계해서 제의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나오고 난 뒤 국무부 측에서도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부인을 했습니다만, 尹永寬 장관께서 파월 장관께 말씀드린 것은 연계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우리로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별도로 검토하더라도 전반적인 한반도 안보 상황이 우리로서는 안심되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상황의 설명으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한미동맹 관계의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고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20일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일본과 필리핀만을 통해 정상회담이 열리는 태국으로 갔습니다.

또 SCM과 MCM이 연기되었습니다. SCM과 MCM이 연기된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미 관계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SCM 연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님께서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만, 저희 외교통상부도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국 국방장관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한 3주간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CM이 3주간 연기되면 그전에 하는 MCM은 자동적으로 연기되는 것으로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세 의원** 미 국방장관의 일정이라는 것이 일본 방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맞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은……

○**권영세 의원** 럽즈펠드의 일본 방문일정에 그렇다는 것이 맞습니까?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언론에서 나온 것을 읽은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이라크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월 중순에 못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됐습니다. 차관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다른 의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셨습니까마는, 제가 AP 보도문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식으로 한미 간에 논의된 바 없다고 발언하셨는데 맞지요?

○國防部長官 曹永吉 AP 보도문 말씀입니까?

○권영세 의원 예,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國防部長官 曹永吉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의원 이와 관련해서 폴 윌포비츠 차관은 더 이상 트립와이어(인계철선) 역할은 없다고 미 의회에서 증언했고, 피터 페이스 합참차장은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논의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 그리고 미군의 전력증강과 전력 현대화를 감안할 때 일부 수준의 변화가 있을 개연성은 있다고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하나의 공식적인 의제로서 양 국방부 간에 논의가 되었거나 또는 그런 의제가 제안된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권영세 의원 지금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지난 정부 이래 현 정권에 대해서도 북한과 내밀한 라인을 두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크게 신뢰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 차원의 협력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닙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장관님께서 조금 아까 AP 보도에 대해서 오보라고 주장하시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대응책을 마련하

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國防部長官 曹永吉 미 국방성 자체에서 대변인이 그것을 정식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권영세 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정말 오보라 하더라도 있음직한 시나리오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이 원정군 형태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기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하나의 주장으로 고려해서 실제 협상 시에 각 주장별로 우리 측의 대응책을 세워 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의 바텀 라인을 정하는 등의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문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 연말부터, 또 금년 초부터 수차례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용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무 대응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양 당국 간에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세 의원 그러면 우리 국방부 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國防部長官 曹永吉 아닙니다.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러한 반대논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副議長 金台植 권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金武星 의원님의 신상발언과 玄敬大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종결을 선포하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의원신상발언

(18시00분)

○副議長 金台植 먼저 金武星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武星 議員 평소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던 제가 그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점점 좌경화되어 가고 있는데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던 차에 당에 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제보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의 발언 때문에 유시민 의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 발언이 속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된 발언이 국회의 권위를 손상케 한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副議長 金台植 이제 서로 좋은 이해의 폭을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 5분자유발언

(18시02분)

○副議長 金台植 다음에는 玄敬大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敬大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제주시 출신의 玄敬大 의원입니다.

高建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15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4·3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서 자행된 온갖 인권유린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과 함께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의 뒀안길에 묻혀 있던 제주4·3사건이 이제야 밝은 역사의 장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야 했던 희생자 영령들께 이 보고서 발간을 보고 드리면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말 한마디 못 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도 못한 채 눈물을 가슴에 담고 지내야 했던 금기의 세월 동안 응어리 맺힌 유족 여러분의 한을 이제 조금이라도 푸시기 바랍니다.

7년 전인 96년에 국회4·3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청원과 제주도4·3진상규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서 99년 11월 18일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발의했던 본 의원으로서 4·3진상보고서의 확정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4·3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4·3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은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4·3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크게 노력해 오신 4·3유족회와 4·3연구소,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제주도 의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2년여에 걸친 자료의 수집·분석, 6개월간의 보고서 작성, 그리고 다시 6개월에 걸친 유예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방대한 보고서를 확정 지은 제주4·3위원회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4·3진상보고서가 확정된 만큼 제주4·3사건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 주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즉각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에서 공권력에 의한 무차별적인 인권유린이 밝혀진 이상 약속대로 盧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4·3 관련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집단 매장지와 유적지 발굴사업, 왜곡 기술되어 있는 4·3 관련 각종 자료의 수정작업, 4·3평화공원 조성 사업, 제주 평화의 섬 사업 등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히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4·3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4·3추모기념일을 제정함은 물론 4·3진상보고서를 평화와 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고,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정부의 진상보고서 확정을 계기로 이제 대립과 갈등의 해소를 통한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台植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서면답변서】

○國務總理 高建

(안영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와 관련, 올해 7월 제3차 한미동맹조정회의 준비과정에서 국방부 정책실장과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기존 합의서의 핵심적 내용을 포괄협정에 반영하고, 세부적 내용의 부록은 따로 만들며, 포괄협정만 국회로 가게 된다”는 발언을 하고, 북미국장은 “1990년도 합의서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다”라며 미국 입장을 두둔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이 국민정서에 맞고 적절한지?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포괄협정만 국회로 가게 된다’, ‘90년도 합의서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90년 합의가 국내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청구권 및 손실보상 문제 등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조항들을 삭제함은 물론 전체적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서를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새로운 합의서는 국회의 동의와 국민적 지지하에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취할 예정입니다.

○出席議員(238人)

강 봉 균	강 성 구	姜 雲 太	강 재 섭
姜 昌 成	姜 昌 熙	高 珍 富	高 興 吉
具 鍾 泰	權 琪 述	권 영 세	權 五 乙
權 哲 賢	權 泰 望	金 景 梓	金 敬 天

金 光 元	김 근 태	金 杞 培	金 洪 春
김 덕 규	金 德 龍	김 덕 배	金 東 旭
金 樂 冀	김 만 제	金 武 星	金 文 洙
金 秉 浩	김 부 검	김 상 현	金 聖 順
김 성 조	김 성 호	金 映 宣	김 영 춘
김 영 환	金 玉 斗	金 容 甲	金 容 鈞
金 龍 學	金 雲 龍	金 元 吉	김 원 웅
김 일 윤	金 政 夫	김 정 숙	金 鍾 河
金 宗 鎬	金 鎭 載	金 燦 于	金 忠 兆
金 台 植	김 태 홍	김 택 기	金 鶴 松
金 學 元	김 형 오	김 흥 신	김 홍 일
金 晁 植	金 孝 錫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都 鍾 伊	孟 亨 奎
문 석 호	민 봉 기	朴 寬 用	朴 權 惠
朴 明 煥	박 병 윤	朴 相 千	朴 相 熙
朴 世 煥	박承國	박 시 균	朴 源 弘
朴 仁 相	박在旭	朴 鍾 根	朴 宗 雨
朴 鍾 雄	박 중 희	朴 柱 宣	朴 柱 千
박 진	박 창 달	朴 憲 基	박 혁 규
朴 熺 太	배 기 신	裴 奇 雲	白 承 弘
서 병 수	서 상 섭	徐 廷 和	徐 淸 源
薛 勳	손 희 정	송 광 호	송 석 찬
송 영 길	송 영 진	송 훈 석	辛 卿 植
신 계 룬	신 기 남	申 榮 國	申 榮 均
신 현 태	沈 揆 喆	沈 載 權	심 재 철
안 경 룰	安 東 善	安 商 守	안 영 근
안 택 수	梁 正 圭	嚴 虎 聲	오 경 훈
오 세 훈	오 영 식	元 裕 哲	원 희 룡
유 시 민	劉 容 泰	유 재 건	柳 在 珪
柳 興 洙	윤 두 환	尹 汝 雋	尹 榮 卓
尹 鐵 相	尹 漢 道	李 康 斗	이 강 래
李 敬 在	이 낙 연	李 萬 燮	李 方 鎬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李 相 培
이 상 수	李 祥 羲	이 성 현	이 승 철
李 良 熙	李 嬾 淑	李 完 九	李 龍 三
이 우 재	李 元 昌	이 원 형	李 允 盛
李 允 洙	李 仁 基	이 인 제	李 在 善
李 在 五	李 在 昌	이 중 결	李 柱 榮
이 창 복	李 漢 久	李 漢 東	李 海 龜
이 해 봉	李 協	이 호 웅	李 訓 平
이 희 규	林 仁 培	林 鎭 出	임 채 정
任 太 熙	張 光 根	張 誠 源	장 영 달
張 在 植	張 泰 玩	全 甲 吉	田 塔 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鄭 均 桓
정 대 철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鄭亨根	鄭鎭碩	鄭창화	鄭哲基
趙舜衡	趙在煥	趙富英	趙성준
曹喜旭	朱鎭盱	趙정무	趙漢天
崔明憲	崔炳國	천용택	천정배
崔鉛熙	崔榮熙	崔秉烈	崔善榮
秋美愛	河舜鳳	최용규	최재승
咸承熙	허운나	韓和甲	咸錫宰
玄勝一	洪文鐘	許泰烈	玄敬大
洪準杓	황우여	洪思德	홍재형

○請暇議員(13人)

강신성일	김명섭	金允式	목요상
박병석	박상규	윤경식	이규택
이원성	李正一	정몽준	鄭宇澤
韓昇洙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국무총리	高建
통일부장관	丁世鉉
국방부장관	曹永吉
행정자치부장관	許成寬

○出席政府委員

외교통상부차관	金在燮
---------	-----

【報告事項】

○議案提出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10월17일 송영길·천정배·김덕배·천용택·이종걸·김영춘·임종석·김성호·유재건·이호웅·김희선·신기남·김명섭·이원성·정동채·송석찬·정동영·남궁석·김부겸·배기선 의원 발의)

10월1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정부산하기관운영개선및서비스증진을위한기본법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

(10월17일 전갑길·이낙연·김성순·김운용·허운나·최선영·유재규·유재건·정철기·배기운·이훈평 의원 발의)

10월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10월17일 김효석·한화갑·강운태·강봉균·구종태·임종석·이용삼·배기운·전갑길·박상희·홍재형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10월17일 김효석·한화갑·김근태·강운태·구종태·강봉균·이용삼·배기운·전갑길·임종석·박상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1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황식 의원 대표발의)

(10월17일 김황식·이경제·김정부·서병수·허태열·송광호·백승홍·최연희·민봉기·박종근·이성현·전용학·황우여·권기술·장광근·안택수·김병호 의원 발의)

10월1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10월18일 이종걸·박상규·신기남·송영길·정동영·유시민·임종석·김황식·유재건·허운나·김희선·이강래·정장선·이재정·천정배·김태홍·김영춘·김부겸·김원기·정동채·임채정·남궁석·이호웅·정대철·이원성·김명섭·안영근·천용택·전갑길·이창복·김근태·송영진·강봉균·김덕규·이희규·김덕배·조배숙·이부영·이미경·장영달·송석찬·정세균·이우재·배기선·홍재형 의원 발의)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

(10월18일 김성호·배기선·정동채·정진석·김희선·김원용·김성순·배기운·유재건·김태홍·신기남·천정배·정장선·임종석·이창복·김용학·안택수·이낙연·심재권·김명섭·송영진·송석찬·천용택·이부영·남궁석·정동영·정세균 의원 발의)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請願提出

자연재해대책법상국고보조대상추가에관한청원

(2003년10월17일 경남 마산시 합포구 해운동 58 경민 시티빌 1502호 김호일 외 1415인으로 부터 정우택·권태망·전갑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